

연구보고서
2006-04



충청권 지역경제 정책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연구

신동호 · 강영주

연구보고서 2006-04

충청권 지역경제 정책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연구

신동호 · 강영주

차 례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4 연구의 한계	3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2.1 이론적 배경	4
2.2 선행연구	5
3. 충청권의 사회·경제적 특성분석	11
3.1 충청권의 입지적 특성과 위상	11
3.2 충청권의 경제적 특징	13
3.3 충청권의 지역과학기술 및 R&D 역량	40
3.4 충청권의 사회·경제적 문제점	54
4. 지역정부간 협력에 관한 해외사례	56
4.1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정부간 협력체제와 협력사업	56
4.2 캐나다 벤쿠버 광역지역 정부간 협력체제와 협력사업	62
5. 충청권 광역지자체간 협력과 갈등사례	71
5.1 협력사례	71
5.2 갈등사례	79
6. 충청권 광역 경제체제 구축방안	95
6.1 기존 행정협의회의 성과	95

6.2 광역경제권 사업제안	97
참고문헌	107
부록 1. 충청권 IT산업 분석결과	112
부록 2.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114
부록 3. 대구·경북 동반발전을 위한 경제통합 방안	129

표 차 례

<표 1> 충청권 인구규모	13
<표 2>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교	20
<표 3> 충청권 지역의 산업구조	21
<표 4> 충청권 지역 산업별 구성비 변화 비교	22
<표 5> 충청권 입지상 계수	24
<표 6> 광역 자치단체별 입지상 계수	26
<표 7> 충청권 산업특화도 분포	27
<표 8> 충청권 지역특화산업	28
<표 9> 세세분류상 지역특화산업	30
<표 10> 충청권 공동 육성가능 산업	33
<표 11> 충청권 지역전략산업	35
<표 12> 충청권 산업단지 현황	37
<표 13> 충청권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39
<표 14> 연구개발 기관 분포 현황	41
<표 15> 연구개발 자원의 분포 현황	42
<표 16> 우수연구센터 설치 현황	43
<표 17> 충청권내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44
<표 18> 충청권내 ITRC 현황	46
<표 19> 대전·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프트타운 현황	47
<표 20> 충청권내 지역혁신기반센터 현황	48
<표 21> 충청권 지역혁신협의회 현황	49
<표 22> 충남·충북 테크노파크 현황	50
<표 23> ABAG의 사업영역	59
<표 24> GVRD 제공 서비스	64
<표 25> 충청권행정협의회 협력 안건명	73
<표 26> 대청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87
<표 27> 지자체 관련 민원 현황	91
<표 28> 주민집단 관련 민원현황	93
<표 29> 세계적 광역클러스터의 규모	101

그 립 차 례

<그림 1> 전국대비 충청권 인구비중 변화 추이	14
<그림 2> 충청권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15
<그림 3> 대전 1970 인구구조	16
<그림 4> 대전 2005 인구구조	16
<그림 5> 충남 1970 인구구조	17
<그림 6> 충남 2005 인구구조	17
<그림 7> 충북 1970 인구구조	18
<그림 8> 충북 2005 인구구조	18
<그림 9> 충청권 산업단지의 입지분포	38
<그림 10> 대전광역시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도	51
<그림 11> 충청북도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도	52
<그림 12> 충청남도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도	53
<그림 13> ABAG 영역	57
<그림 14> ABAG 기구	58
<그림 15> GVRD 영역	63
<그림 16> GVRD 녹지공간	69
<그림 17> 경부고속철도 노선 및 건설 현장 모습	82
<그림 18> 충청권 IT산업 집적지	101
<그림 19> 충청권 R&D클러스터조성 구상도	102
<그림 20> 충청권 4+4산업벨트조성 구상도	10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역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부권 250만 주민의 젓줄인 대청호에 접한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청호의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인 행정협의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중부권 복합 화물터미널이나 청주공항의 입지선정, 그리고 최근에는 고속철도의 호남선 분기점 지정 등을 둘러싸고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사이에 마찰이 있다. 수도권 한강, 그리고 영남권의 낙동강 수계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군장(군산-장항) 산업단지의 건설 등과 같은 문제를 놓고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청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동일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서로 인접해 있어서 공동 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도시화의 정도, 기타 사회,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지역 간, 지역 내에 각기 다른 측면이 있어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와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및 대수도권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권 지역경제를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차별성과 동질성을 규명하는 한편, 협력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문제를 정부 간 협회로 해결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를 중심으로 한 ABAG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와 정부 간 협회에 의한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Vancouver)를 중심으로 한 GVRD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그리고 독일 루르 (Ruhr)지방의 RVR (Regionalverband Ruhr)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에 근거하여, 그리고 충청권의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징과 현황을 감안하여 충청권의 경제문제를 광역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와 관련 사업

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광역 경제정책 체제가 확실하고, 학문적 깊이가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미국, 캐나다, 독일의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을 검토하여 충청권의 경제에 대한 광역적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체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ABAG,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GVRD, 그리고 독일 루르 지역의 RVR 등과 같은 광역계획체제가 태동하게 된 배경과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그러한 기관이 광역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한편, 그들이 취급하는 업무영역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충청권이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협력 및 갈등에 관한 지역 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충청권을 독립된 행정단위로써, 또 이를 통합한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건을 분석한 다음, 충청권에 필요한 바람직한 광역경제체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전, 충남·북이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충청권, 즉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연구범위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주로 지난 10년 정도의 기간에 있었던 각종 변화와 발전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충청권 광역경제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의 선진사례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바, 각 사례지역에서 광역계획체제가 구축되기 시작된 시기부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권의 경제문제를 광역적 협력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그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광역계획으로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한다. 그리고 충

청권의 경제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LQ 등 간단한 지역경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지역 내 3개 지자체간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특징 등을 규명하고, 3개 지역을 통합한 하나의 지역을 전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 등을 규명한다.

1.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정책연구이다. 비록 이 연구는 지역 간, 혹은 정부 간 협력이나 갈등에 관한 이론적 맥락에서 추진하고, 또 사례연구 방법 및 입지상법 등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지만, 그것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수준에 한한다. 그러한 사례 및 현상에 대한 분석결과가 기존의 이론에 시사하는 바 등,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에 기대하기로 한다. 또한 충청권의 광역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이미 국토연구원 (2001) 등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어서 그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시간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범 사례가 될 만한 사업과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이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고 본다. 첫째는 광역적 접근의 필요성, 즉 “광역경제체제”는 왜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이고, 둘째는 성공적인 체제를 구축하자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야이다. 셋째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바, 그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광역경제, 혹은 행정이나 계획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중심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관계, 둘 이상의 도시가 성장하면서 연담화 하는데 따른 광역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인 LQ 등과 같은 지역경제 분석기법은 1950년대에 개발된 기법이다. 그러한 계량적 분석기법은 고도의 수학적 능력을 도입하는 기법으로 발전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50년 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 분석기법은 특별한 전문성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또 본 보고서가 목적하는 바를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본 보고서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광역경제, 혹은 광역계획체제에 대한 논의는 역시 정부간 관계 (inter-government relation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간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는 1970년대의 Wildavsky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집행에 관한 논의로 시작하였는데, 이는 정책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로 진전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럽 통합이 큰 과제로 대두되면서, 또한 정책문제에 정부 외 시민단체, 기업 등이 개입하면서 거버넌스론으로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사실 전통적 정부 간 관계론은 주로 상하급 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초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주 내용인 지역 간 협력이나 갈등문제는 상하급 정부 간 관계라기보다는 동급 정부 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관

계에 가깝다. 또한 최근 들어 정책문제에 정부 외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문제는 단순히 상하급 정부관계를 주로 취급하는 전통적 정부관계론 보다는 거버넌스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정부관계와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연구와 국내의 사례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1) 전통적 정부간 관계론

국제적 연구동향을 볼 때, 정부 간 관계 이론은 미국의 Wildavsky (1973) 등에 의해 주도된 정책집행(Implementation)에 관한 연구에서 기원하여 Wright(1978) 등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정부 간 관계의 이론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즉 상하급 정부 간 관계가 연구의 초점이었다. 그 가운데 Wright(1978)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호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내포관계 모형(inclusive model), 둘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 분리관계 모형(separated model), 셋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중첩관계 모형(overlapping model)이 있다(한승준 2006).

한편 Wilson과 Game(1998: 115-124)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대리인 모형, 권력의존 모형, 지배인 모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리인 모형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권력의존 모형에서는 양자는 동반자적이고 평등하며, 지배인 모형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한승준 2006).

이와 관련해서 Tuite(1972)나 White(1974) 등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는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상호이익의 정도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Weiss(1987)는 지방정부 간 협력은 공동의 문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공동제공, 생활편의시설의 공동설치 등의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해 협상은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반면 이익유발시설 혹은 혐오시설의 경우에는 협상에서 갈등이 커지고 당사자 간의 불만이 높아진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협상력은 지방정부의 권력적 관계, 내부적인 행정력, 협력 당사자의 전문성

등과 협상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승준 2006). 이러한 정부 간 관계론은 이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거쳐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2) 거버넌스론에 대한 연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최근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관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거버넌스는 주민과 시민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참여적 통치체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론을 비롯해 정부 간 관계론, 다층적 거버넌스 및 지역 거버넌스론과 같이 “구조(Structure)”에 초점을 둔 연구와 “과정(Process)”에 초점을 둔 파트너십 이론, 협력적 계획이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구조적 측면의 거버넌스론은 수직적, 위계적 관계모형에서 수평적, 상호의존적, 협력적 네트워크 중심의 관계 모형으로 변모해 왔으며, 한정된 주체에서 다수 주체 간의 관계 모형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구조적, 거시적 측면에 대한 강조에서 점차 과정, 시스템 등 미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론이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Innes (2003, 2006)가 제안하였듯이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이 실무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에 관련한 국제적인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혁신체제 및 지역개발기구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Rosenau(1992), Jessop(1998), Stoker(1996, 1997), Leach와 Percy-Smith(2001), Pierre와 Peters(2000) 등은 정치학, 사회학 분야의 학자로 이들은 세계 정치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축소, 특히 EU 등 초국가 조직과 개별 국가 및 지역단위들과의 관계변화 및 공간적 재편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행정학, 지역개발학 분야를 중심으로 분권화와 세계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관리방식의 변화, 지역단위 정책의 추진체제의 변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행기제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에 초점을 두고 지역개발기구와 지역여건과의 관계, 지역개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지역개발기구 및 지방 정부와 EU체제와의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Cooke 1996; Heinelt 1996; Danson *et al.* 2000; Armstrong and Taylor 2000; Hooghes and Marks 2001).

거버넌스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와 정부 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도입을 전후하여 중점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주로 기능 및 사무단위에 초점을 두었다(김용웅 외 199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홍준현 2000, 참조). 그리고 민주화, 세계화, 분권화 등 기존 질서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행정학, 정치학 분야에서 신 공공관리와 시민사회의 등장에 따른 대안적인 국정관리의 패션을 설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석준 2000; 김정렬 2000; 정정길 2000).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비정부조직(NGO)을 주체로 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및 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역단위의 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협의체 및 비정부조직의 역할과 관계 변화를 다룬 강황선·최병대(2001), 조명래(2001), 이병수 외 (2001) 등과 같은 연구가 있다.

셋째, 분권화에 따른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중복적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중앙-지방 간 지역개발 협약제도, 정부-민간 파트너십 촉진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적 계획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등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한국행정연구원 2002; 박양호 외 2000; 건설교통부 2001; 박우서 2001; 차미숙 2001, 2003; 한표환 외 2002, 등).

3) 지역 간 갈등과 협력에 관한 연구

지역 간 갈등 및 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로 특별히 본보고서에서 소개한 사례지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자면, 우선 샌프란시스코 지방정부협회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할 수 있다. 그 가운데 Tranter (2001)는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ABAG이 태동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후 최근까지 그 기관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하부기관 (예: 교통국, MTC) 등 조직기구의 변화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는 또한 ABAG이 최근에 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제들을 취급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Pallagst(2006)는 샌프란시스코만의 성장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계획이론과 이해관계자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이론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연구방법으로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성장관리에 관한 원칙과 철학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해 내고, 그에 기초하여 분석 틀 (Analytical Framework)을 작성한 다음, 그 분석 틀을 적용하여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성장관리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장점과 단점 등을 규명했다.

Judith Innes는 UC Berkeley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로 도시계획과 거버넌스에 관해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Innes and Booher(2003)는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정부가 지역 간 설정된 경계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집단적 대화(Collaborative Dialogue)를 주축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Innes는 최근 가뭄으로 인해 상습적인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 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 산하에 CALFRED란 기구를 조직하고 그 기구를 통해 협력적(Collaborative)이고 다양한 수자원 개발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과정에 관계된 지방정부와 이해집단들이 상호 경쟁하고 협상하는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종전의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관여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CALFRED는 “Collaborative Governance”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측하기 곤란한 미래의 변화와 분열(Fragmentation)에 직면하여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날의 공공 행정과 민간 기업경영으로부터 주목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Innes *et. al.* 2006).

국내 연구자 가운데 ABAG을 소개한 이들이 있는데, 그 중 김용웅 (1995a)은 미국 LA지역의 정부 간 협의체인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와 ABAG을 소개하면서 ABAG가 어떻게 운영되고,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부 간 협회의 운영과 광역적 도시권 계획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또한 ABAG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상호 교류하고, 또 전체 지역의 교통문제를 관리하는 광역 교통국(MTC)과 같은 ABAG 산하 기구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이며 커버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잘 소개하고 있다. 김용웅(1995b)은 또한 비록 ABAG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외국의 계획제도 비교연구”란 제목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광역개발계획 제도들을 소개하였다.

한편, 박양호(2000: 91-92)는 국토연구원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간 협약제도 가운데 ABAG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미국은 “정부 간 협력법(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ct)”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주 정부차원에서는 지방 간 협력법(Inter-local Cooperation Act)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본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사례로 든 GVRD에 관한 연구 중 McGee (1999)는 GVRD의 역사를 소개하고, 또 GVRD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영역을 다루는가 등에 대한 개론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밴쿠버가 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GVRD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참여 지방정부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Sancton(2001)은 GVRD와 캐나다 토론토의 광역도시권인 GTSB(Greater Toronto Services Board)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양 지역은 계획기구가 중요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마찰을 유발하지 않고 광역계획 기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밴쿠버의 경우 캐나다의 다른 도시, 즉 토론토나 몬트리올과 달리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구로 성장할 수 있었고, GVRD의 계획수립과 집행 체계는 캐나다의 다른 사례보다 오히려 미국의 사례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Meligrana(1999)는 GVRD를 사례로 밴쿠버의 광역 교통계획과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또 집행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그는 밴쿠버의 교통정책은 GRTA(Greater Regional Transit Authority)라는 독립된 기구를 설립해서 주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책개발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해서 지역통합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GVRD와 관련해서 많은 보고서가 있지만 이들은 주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공원관리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의 최근 저서 “Redrawing Local Government Boundaries: an International Study of Politics, Procedures, and Decisions (Vancouver, BC: UBC Press, 2004)”는 지역갈등에 있어서 전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 간 경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은 유럽 국가와 중국,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별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련된 과제와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장별로 편집한 책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Dong-Ho Shin이 1994년부터 전개되었던 “도농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Rothblat and Sancton(1998)은 북미의 광역도시권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총 6개의 광역도시권에 대해 광역계획의 수립과정 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학자들이 각기 자기가 관여한 사례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모은 것이다. Rothblat(1998)는 각 사례지역에 대해 광역계획이 초창기에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떠한 영역을 취급하였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집단이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그 연구는 또한 각 지역이 당면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문제점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광역시와 주변지역 간 발생한 갈등문제를 국제적인 문헌에 소개한 Shin(2000)은 부산광역시가 성장하면서 성장의 부정적 효과가 그 주변지역인 경남지역으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변지역을 흡수통합하여 해결하는 안, 협약에 의해 해결하는 안, 협력적 계획에 의해 해결하는 안 등이 있는데, 부산시와 그 주변지역인 경남은 정부 간, 의회 간, 주민 간 3중의 협력체계에 의한 계획으로 비교적 원활한 해결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3. 충청권의 사회·경제적 특성분석

3.1 충청권의 입지적 특성과 위상

1) 지리적 특성

충청권은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여타 지역 간에 개발효과를 확산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는 서해안 시대의 관문항으로 국토개발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선 충청권은 수도권내의 서해안 산업지대와 국토 서남부에 입지한 산업 및 교역지대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서해안 개발의 연계축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내륙중심부는 서울 등 수도권 내 거대 도시축과 경부축, 호남축을 잇는 도시개발 및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충청권 서해안은 관문항을 보유하고 있어 환황해경제권내 교류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문항 기능을 수행할 군장신항과 보령항, 아산항은 중국의 황해연안 관문항인 대련항, 청도항과 300km정도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서 대중국 교역의 관문항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충청권은 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도권,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남쪽으로는 전라북도에 접하여 있어 수도권 개발압력의 1차적인 흡수·완충기능을 수행하고, 개발효과를 여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 경제환경의 변화와 충청권의 위상

경제규모의 지구화, 경제부문간 융합화, 경제체제의 유연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경제는 어느 때보다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이 지닌

경쟁력에 따라 지역 내 산업연계 및 협력에 의한 생산이 확대되고, 기업단위 생산 체제에서 지역단위 생산체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권은 국내뿐만 아니라 환황해 경제권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위상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70년대 중반 설립된 대덕 연구단지는 지난 30년간 원천기술 등 국가과학기술 지식생산의 중심지로 고급인력 양성과 풍부한 R&D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덕 R&D 특구 지정으로 충남·북의 생산기능과 연계하여 R&D의 상용화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충청권은 행정, 과학, 지식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청주공항의 활성화, 평택·당진항 개발, 중부권물류기지 등 국제적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산업입지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구시설 집적지역으로 기술 정보의 활용, 각종 시험연구 등이 활발하고 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하여 충청권에는 많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고급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충남의 북서부 지역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및 전자정보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고, 충북의 오창산업단지와 청주에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충청권이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동북아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금융,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와 무역, 국제업무, 대기업 본사 등 경제적 중추관리 기능이 미약하여 자립경제기능이 취약하고, 충청권 내의 산·학·연·관 연계구축이 아직 미약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적 연계나 협력체계의 운영경험과 능력이 미흡하고,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개발과 예산집행으로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3.2 충청권의 경제적 특징

1) 인구규모

2005년을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484만 명으로 전국의 10%를 점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인구는 2001년 141만 명에서 2004년에는 약 146만 명으로 성장하다가 2005년에는 14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충북의 경우는 148만 명으로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대비 인구비율 역시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05년에는 3.0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는 매년 약 2만 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일어나 2005년에는 190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전국 대비 인구비율도 소폭 증가하여 3.9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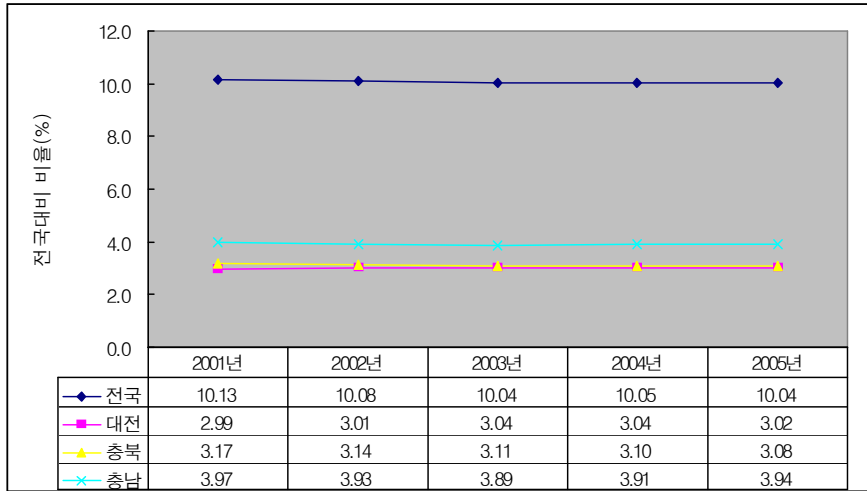
<표 1> 충청권 인구규모

(단위 : 명,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47,353,519	47,615,132	47,847,227	48,082,163	48,294,143
충청권	4,795,350 (10.13)	4,799,734 (10.08)	4,807,638 (10.04)	4,835,601 (10.05)	4,848,366 (10.04)
대전	1,417,873 (2.99)	1,433,881 (3.01)	1,453,994 (3.04)	1,463,767 (3.04)	1,458,269 (3.02)
충북	1,499,090 (3.17)	1,495,165 (3.14)	1,490,142 (3.11)	1,490,344 (3.10)	1,487,359 (3.08)
충남	1,878,387 (3.97)	1,870,688 (3.93)	1,863,502 (3.89)	1,881,490 (3.91)	1,902,738 (3.94)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제정리.

<그림 1> 전국대비 충청권 인구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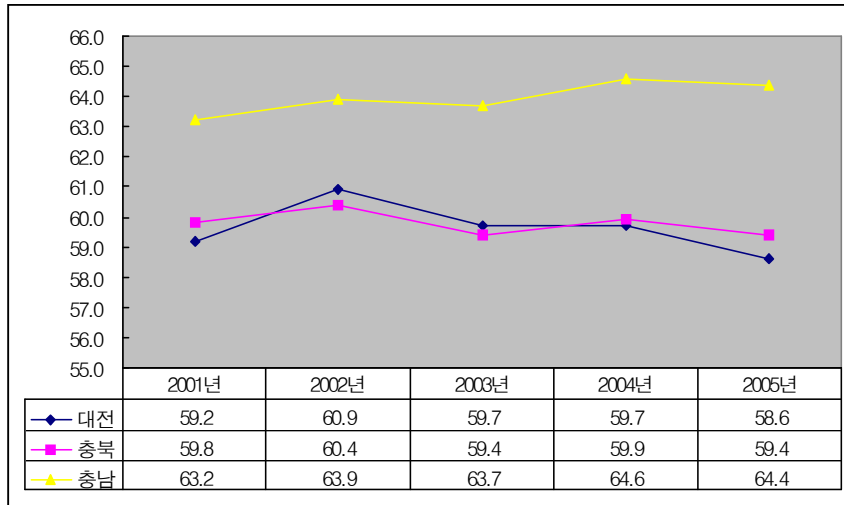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재정리.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충청권의 전국대비 인구규모는 각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

2005년을 기준으로 충청권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충남을 제외하고 대전, 충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의 60.9%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58.6%에 이르고 있다. 충북의 경우는 기복 없이 60%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충남의 경우는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05년 현재 64.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 충청권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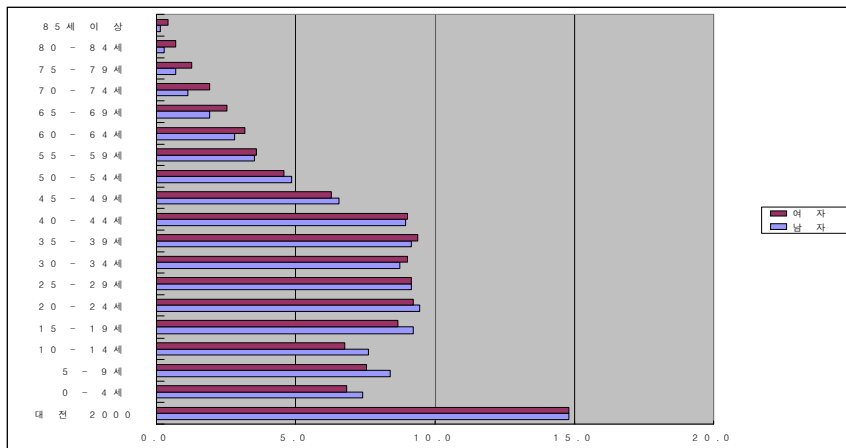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재정리.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충청권 전체에 걸쳐 경제 및 산업활동에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덕 R&D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가시화되고, 청주공항, 당진·평택항, 오송 KTX역, 탕정 단지, 오송·오창 과학단지 등 산업인프라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급격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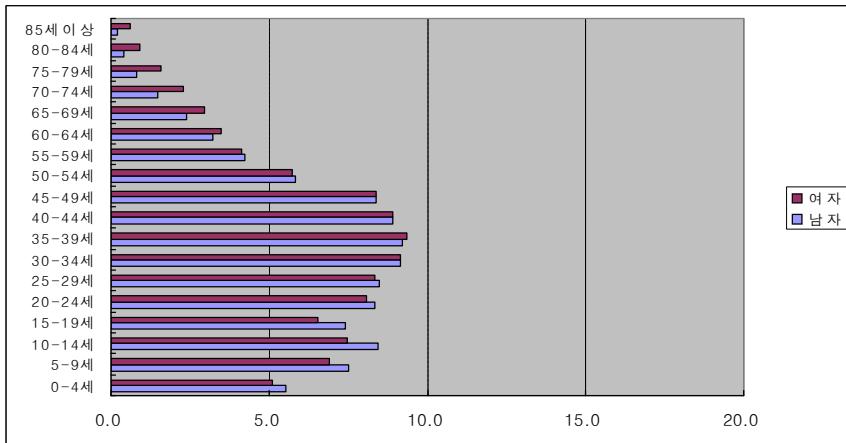
2) 계층별 인구구성의 변화

이상에서 충청권의 총인구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구 중 연령별 인구계층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3>을 기초로 대전시의 1970년의 인구를 보면 총인구 중 20세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녀 인구를 막론하고 각각 12%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20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50세 이상 노령 인구는 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에 반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제활동력이 완성한 청년층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대전 1970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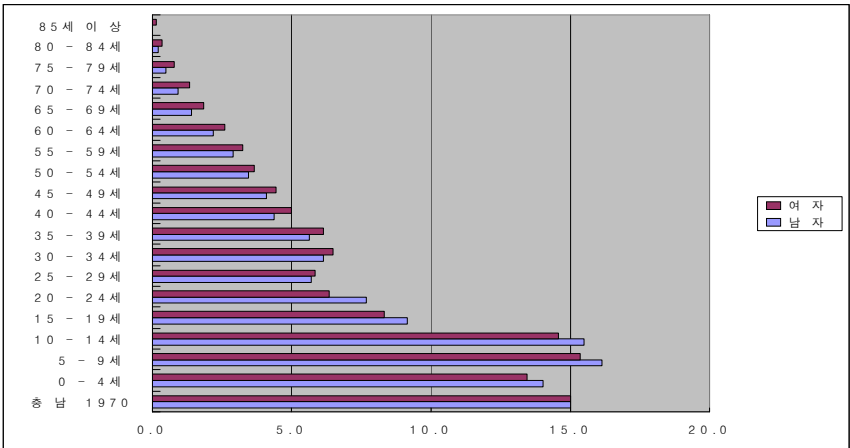
<그림 4> 대전 2005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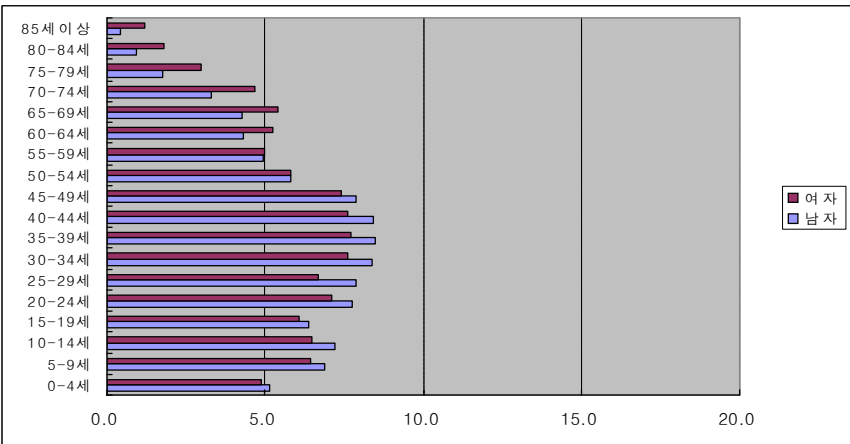
<그림 5>은 1970년 대전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의 비중이 특히 크고, 15세부터 40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대전시에 비해 40세 이상 장년층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는 2005년의 충청남도 인구의 연령별 계층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30년 전에 비해 크게 변모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0세부터 20세까지의 인구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25세 이상 50세 미만의 장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에 반해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년층의 인구가 적고 노년층, 혹은 그에 가까운 인구의 비중이 커서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충남 1970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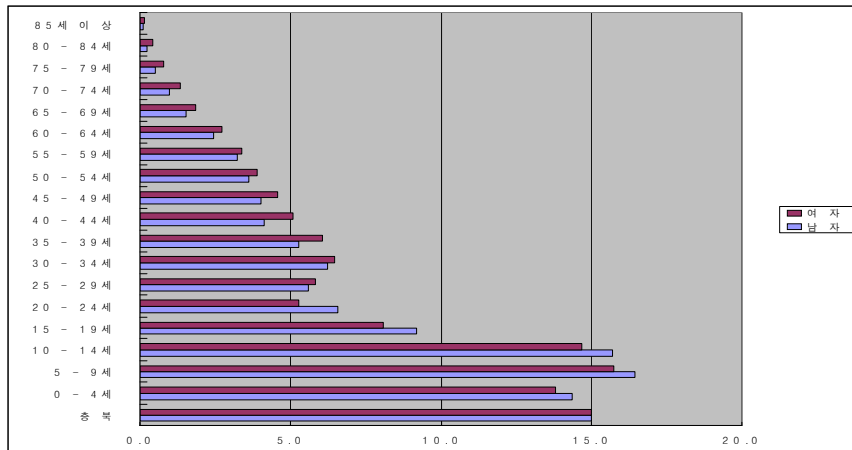


<그림 6> 충남 2005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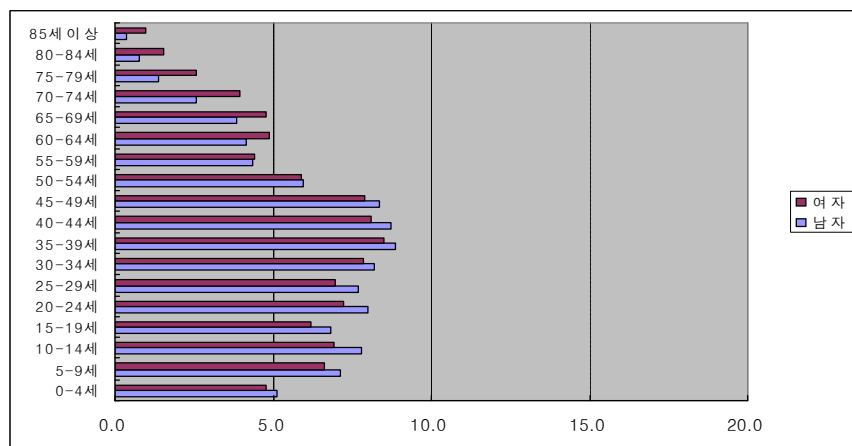
1970년 충청북도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15세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그림 7> 참조).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유소년 층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특히 크다는 점이다.

<그림 7> 충북 1970 인구구조



이러한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2005년에 와서 크게 변모하였다(<그림 8>참조). 즉, 15세 미만의 유소년 층 인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0-4세 남성의 경우는 3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5-9세의 남성의 경우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8> 충북 2005 인구구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난 30년간 충청권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층 인구의 비중은 낮아진데 비해,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장년층 인구와 5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충청권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내 총생산

2004년 기준으로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조 2,050억원으로 전국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충청권이 인구규모와 함께 전국 대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대전이 18조 5,500억원, 충북이 25조 4,190억원, 충남이 43조 2,360억원이다.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충청권 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 9.2% 수준에서 2000년에는 11.1%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과 대비하여 대전은 1990년에 2.4%에서 2004년에도 2.4%로 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충북은 1990년에 3.0%에서 2004년에 3.2%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고, 충남은 1990년의 3.8%에서 2004년에 5.5%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같은 기간에 충청권 지역의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충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교

(단위 : 10억원)

구 분	1990	1995	1998	2000	2002	2004
전 국	194,546	410,131	479,824	577,971	685,946	786,362
수도권	91,310 (46.9)	195,804 (47.7)	221,734 (46.2)	276,516 (47.8)	334,248 (48.7)	372,262 (47.3)
충청권	17,987 (9.2)	40,928 (10.0)	50,287 (10.5)	62,043 (10.7)	71,941 (10.5)	87,205 (11.1)
대전	4,711	9,560	11,423	13,559	16,046	18,550
충북	5,931	14,038	16,074	19,521	21,500	25,419
충남	7,345	17,330	22,790	28,963	34,395	43,23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4) 산업구조

2004년을 기준으로 충청권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표 3>), 대전의 경우 1차 산업이 0.4%, 2차 산업이 19.0%, 3차 산업이 80.6%로 서비스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과 충남은 2차 산업 비중이 각각 40.4%, 42.0%로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3개 시·도 모두 차이는 있지만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3차 산업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충청권 지역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

(단위 : %)

구 분	대전		충북		충남	
	2000	2004	2000	2004	2000	2004
1차산업	0.5	0.4	8.6	6.6	12.2	8.9
2차산업	21.3	19.0	40.6	40.4	39.1	42.0
3차산업	78.2	80.6	50.8	53.0	48.7	49.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충청권 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를 2000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4> 참조), 대전의 경우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북과 충남의 경우 대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만 충남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진 점이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충청권 지역 산업별 구성비 변화 비교(부가가치 기준)

(단위 : %)

구 분	대전		충북		충남	
	2000	2004	2000	2004	2000	2004
농림어업	0.5	0.4	8.6	6.6	12.2	8.9
광업	0.0	0.0	0.7	0.6	0.5	0.5
제조업	21.3	19.0	39.9	39.8	38.6	41.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8	1.8	2.0	2.0	5.0	4.7
건설업	9.7	10.2	9.1	8.7	9.5	10.9
도소매업	8.2	8.1	3.7	3.9	3.0	2.9
숙박 및 음식점업	2.9	2.9	2.5	2.3	1.9	2.0
운수업	4.4	4.0	3.2	3.0	3.1	2.3
통신업	2.3	2.5	1.4	1.8	1.4	1.4
금융 및 보험업	7.6	8.8	3.6	4.7	2.9	3.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8.1	17.3	8.2	7.4	6.4	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8	8.4	7.7	8.5	7.0	6.6
교육서비스업	7.7	8.4	4.9	5.9	4.9	5.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	3.9	2.1	2.1	1.6	1.7
기타 서비스업	4.6	4.3	2.5	2.7	1.9	1.8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5) 충청권 지역특화산업

충청권의 지역특화산업 규명과 충청권이 공동으로 육성 가능한 산업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분석방법과 분석절차를 따랐다. 분석방법은 지역의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 : LQ)를 활용하였고, 데이터는 2004년 기준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LQ_{ij} = \frac{Q_{ij}/Q_j}{Q_i/Q} = \frac{j\text{지역의 } i\text{산업의구성비}}{\text{전국의 } i\text{산업구성비}}$$

Q_{ij} = j 지역의 i 산업의 종사자수 또는 부가가치액

Q_i = 전국의 i 산업 종사자수 또는 부가가치액

Q_j = j 지역의 총 종사자수 또는 부가가치액

Q = 전국의 총 종사자수 또는 부가가치액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로 산업 중분류(2자리)를 대상으로 하여 전국을 기준으로 충청권의 특화된 부문을 규명 하였다. 2단계로 충청권 내 각 광역자치단체의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권을 기준으로 특화된 부문을 규명 하였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규명된 중분류 상 지역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세세분류(5자리) 까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입지상 계수를 분석하여 충청권이 공동으로 육성 가능한 산업을 추출 하였다.

1단계로 전국을 기준으로 충청권의 입지상 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 모두에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LQ > 1.0$ 이상)은 음·식료품 제조업(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3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업(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등 9개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충청권 입지상 계수(2004년 기준)

중분류	업종	중사자수	부가가치
15	음·식료품 제조업	4.6	1.81
17	섬유제품 제조업	0.8	0.59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	0.14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	0.22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5	0.30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2.02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	0.13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2	0.02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1.40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	1.08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2	1.84
27	제1차 금속산업	0.7	0.36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9	0.6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	0.80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6	0.38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2	1.29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1.18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	1.41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1.29
35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0.1	0.02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6	0.62
37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3	0.80

2단계로 충청권을 기준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별 입지상 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중사자 기준으로 보면, 대전의 경우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22), 제1차 금속산업(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3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업(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의 경우는 음·식료품 제조업(15), 섬유제품 제조업(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제1차금속산업(2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3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재생용가공원료산업(37)으로 분석되었다. 충남의 경우는 음·식료품 제조업(15), 섬유제품 제조업(1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 재생용가공원료 산업(37)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대전의 경우 음·식료품 제조업(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업(33)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의 경우는 음·식료품 제조업(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업(33)으로 분석되었다. 충남의 경우는 음·식료품 제조업(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광역 자치단체별 입지상 계수(2004년 기준)

중분류	업종	대전		충북		충남	
		중사자수	부가가치	중사자수	부가가치	중사자수	부가가치
15	음·식료품 제조업	0.4	1.10	1.1	2.21	1.1	1.68
17	섬유제품 제조업	0.7	0.45	1.1	0.77	1.0	0.51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6	0.41	0.4	0.02	0.6	0.16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4.3	0.75	0.3	0.10	0.5	0.22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9	0.40	1.3	0.41	0.8	0.23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5.05	1.0	1.75	0.8	1.76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3.1	0.74	0.9	0.09	0.4	0.06
23	코크스, 석유정제품및 핵연료제조업	0.0	0.00	0.9	0.01	1.4	0.02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7	1.79	1.2	1.38	1.0	1.36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6	1.43	1.1	1.15	1.1	0.99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3	0.41	1.2	2.41	1.1	1.70
27	제1차금속산업	1.2	0.35	1.0	0.21	0.9	0.45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7	0.53	1.1	0.84	1.0	0.57
29	기타기계및장비 제조업	1.8	3.13	0.7	0.37	1.0	0.73
30	컴퓨터및사무용기기 제조업	1.2	0.18	1.0	0.31	0.9	0.45
31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5	0.27	1.1	1.65	1.1	1.23
32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7	0.38	1.1	1.38	0.7	1.17
33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2.4	2.65	0.6	1.97	0.9	0.90
34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0.8	0.87	0.6	0.32	1.4	1.93
35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8	0.05	0.7	0.02	1.0	0.02
36	가구및기타제품 제조업	1.8	0.89	0.9	0.66	0.9	0.55
37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0.0	0.00	1.2	0.91	1.2	0.83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특화도가 매우 높은 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특화도가 높은 산업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3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업(33)으로 나타났다.

<표 7> 충청권 산업특화도 분포

구분		중사자 기준 특화도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낮음
부가가치 기준 특화도	매우 높음	음식료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화학물및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섬유제품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비교적 높음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낮음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품 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주 1 : 2004년 제조업의 산업 중분류별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여 가공함

주 2 : 매우 높음은 특화계수가 2.0 이상을, 비교적 높음은 1.0 이상 2.0 미만을, 낮음은 1.0 미만을 가리킴

자료 : 필자 작성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청권의 지역특화산업을 추출하였다. 지역특화산업은 중분류 상 전국을 기준으로 충청권 입지상 계수가 1.0이상인면서 동시에 충청권을 기준으로 한 입지상 계수(중사자 수 또는 부가가치 기준)가 1.0이상인 것으로 하였다. 추출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권 지역특화산업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 유형은 3개 광역 자치단체에 모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고, 제2 유형은 2개 광역 자치단체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며, 제3 유형은 1개 광역 자치단체에만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다.

<표 8> 충청권 지역특화산업

구분	충청권 특화산업	비고
15	음식료품제조업	대전, 충남, 충북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충북, 충남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대전, 충북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7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충남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료 : 필자 작성

3단계는 위에서 추출된 중분류 상의 지역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세세분류(5자리)까지 입지상 계수(부가가치 기준)를 산출하여 충청권이 공동으로 육성 가능한 산업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추출하였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육성 가능한 산업은 최소한 다음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3개 광역 자치단체의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공유이익 창출이 큰 분야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충청권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산업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을 설정하였다. 유형의 설정은 A지역과 B지역에는 각각 특화되어 있는 a산업과 b산업이 존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요소들 즉,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금융 등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제1 유형은 A지역과 B지역에 동일한 a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3개 광역 자치단체 모두에 특화된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A지역에서 a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완전한 클러스터가 구성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역 간 협력이 필요 없는 경우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른 하나는 A지역에서 a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완전한 클러스터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로 기술적 연계가 필요한 부분 또는 부품이 B지역의 a산업에 있는 경우 이다. 또한 A지역의 a산업과 B지역의 a산업이 서로 융합될 때 규모의 경제

와 집적의 경계를 발휘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제2 유형은 A지역과 B지역에 a산업과 b산업이 각각 특화되어 존재하는 경우로 a산업과 b산업은 전·후방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산업군(群)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A지역의 a산업과 B지역의 b산업은 기술적 측면이나 가치사슬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두 지역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이다. 이 경우 A지역의 a산업과 B지역의 b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설정하여 공동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성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기술융합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제3 유형은 A지역과 B지역에 a산업과 b산업이 각각 특화되어 존재하고 기술적 측면이나 가치사슬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지만 A지역에만 a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A지역의 a산업을 B지역의 b산업이 지원하는 형태로 두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 양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이다.

위에서 설정한 유형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산업을 제시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입지상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세세분류상 지역특화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명	특화도		
		충남	충북	대전
15111	도축업	1.1	1.7	0.7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9	1.7	0.1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1	0.3	1.8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2.5	2.1	0.0
15132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	2.6	0.0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0.9	1.5	1.5
15139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8	1.1	0.0
152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9	0.3	0.0
152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병과류 제조업	3.4	6.1	0.0
15311	곡물 도정업	1.2	0.7	0.0
153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5	0.0	0.0
153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0.1	2.3	0.0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4.7	0.0	0.0
15330	사료 제조업	1.5	0.5	1.7
15412	떡류 제조업	0.3	0.5	3.6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0.8	2.7	0.1
15430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1	2.6	0.0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3	4.3	0.0
15452	장류 제조업	3.4	0.7	0.0
15491	커피 가공업	0.0	9.1	0.0
15492	차류 가공업	0.9	4.2	0.0
154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0.0	1.0	0.0
154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0.9	2.1	1.2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5.5	1.8	5.4
15496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	0.7	0.0
15497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0.6	6.4	0.0
154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6	3.7	0.0
15512	소주 제조업	0.0	9.8	0.0
15542	생수 생산업	1.3	2.5	0.0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2	1.7	7.3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3.6	0.4	10.5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0.4	5.0	1.1
21124	가공지 제조업	2.4	0.4	0.0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0.8	0.0	66.8
21212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0.3	4.8	0.0
212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0	0.3	11.0
2129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4	1.5	0.0
212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1.0	0.0	0.0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0.0	1.9	0.0
24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1.4	0.5	0.0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0.1	1.3	0.5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1.3	0.0	0.0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0.0	2.7	0.0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0	2.3	0.0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	0.0	0.0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0.8	2.4	1.8
2421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0	0.0	2.3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0.0	1.0	4.0
24221	의약품 약제품 제조업	1.4	1.0	1.7
24222	한의학 조제품 제조업	2.5	0.2	0.0
24223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2.6	0.0	8.6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0.6	2.4	4.9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0.0	1.9	0.0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1.2	0.9	2.4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0.1	0.8	12.5
24333	화장품 제조업	0.9	3.2	12.0
24334	표면광택제 및 실내방향제 제조업	0.2	0.5	1.5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0.0	12.5	0.0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0.7	1.9	1.2
243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0.0	1.1	0.0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0.7	1.9	0.0
24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4	0.8	1.2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0.2	0.2	2.4
25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1.3	0.3	0.7
25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1.3	1.1	0.2
25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0.9	1.2	0.3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	1.6	0.0
25222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8	0.0
25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0.8	3.0	0.5
25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0.7	1.5	7.6
2529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0.5	5.3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제조업	1.1	0.5	0.0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4	0.8	2.3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제조업	1.1	0.5	0.0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4	0.8	2.3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3.2	0.0	0.0
26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3.0	0.0	0.0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0.8	4.5	0.0
26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3.4	0.0	0.0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1	2.5	0.0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	3.7	0.0
26311	시멘트 제조업	0.0	5.8	0.0
26312	석회 제조업	0.0	7.8	0.0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0.0	3.9	0.0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	3.7	0.0
26311	시멘트 제조업	0.0	5.8	0.0
26312	석회 제조업	0.0	7.8	0.0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0.0	3.9	0.0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	3.7	0.0
26311	시멘트 제조업	0.0	5.8	0.0
26312	석회 제조업	0.0	7.8	0.0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0.0	3.9	0.0
26322	레미콘 제조업	0.6	0.5	1.3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9.3	0.0	0.0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1.0	1.0	0.9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6	2.8	0.0
26921	아스콘 제조업	1.1	0.9	0.9
26991	연마재 제조업	0.5	1.9	0.0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0.2	1.3	0.0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0.0	2.9	0.0
2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0	2.3	0.0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0.3	1.5	0.1
31102	변압기 제조업	1.4	0.6	0.0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5	0.1	0.6
31104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1.4	0.8	0.0
3110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3	0.9	0.0
312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0.5	2.7	0.2
3120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0.1	0.3	1.4
31301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0.7	1.6	0.0
31402	축전지 제조업	3.9	0.0	0.0
31522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0.0	0.1	3.4
31911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업	1.3	1.0	0.0
31912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1.3	0.0	0.0
31992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1.0	2.0	0.0
31994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0.0	0.0	2.4
31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기장비 제조업	0.0	0.0	1.9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1.1	0.4	6.0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0.2	1.2	0.0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0.8	2.5	0.0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2.1	0.0	0.0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2.8	0.6	0.2
321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2	0.4	2.0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0.1	0.1	1.2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0.2	1.7	0.2
33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0.0	0.0	1.2
33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1.6	0.0	1.0
33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0.9	0.3	1.2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0.0	0.0	3.0
33214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0.0	0.0	8.5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0.1	6.5	0.0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0.0	4.1	0.0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0	0.0	2.4
33310	안경 제조업	0.9	0.6	14.0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0.0	5.3	0.0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0.0	5.3	0.0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0.0	0.0	4.4
34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5	0.0	0.0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3	0.4	0.0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0.7	0.5	2.0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1.4	0.3	0.2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1.4	0.3	1.7

자료 : 필자 작성

분석결과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산업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충청권 공동 육성가능 산업

유형	세세분류	특징
제1유형	인삼산업 의약품 약제품 화장품 산업	· 3개 시도 공통 특화산업 · 기술적 측면에서 개별산업과 융합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
제2유형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3개 시도에 걸쳐 고르게 분포 · 기술적 연계 및 가치사슬 측면에서 상호보완과 연계가 필요한 산업
제3유형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업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 2개 시도에 분포하나 실질적으로 1개 시도에 특화된 산업 · 시도간 부분별 연계 또는 R&D 지원이 필요한 산업

자료 : 필자 작성

제1유형은 3개 광역 자치단체 모두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인삼산업, 의약품 약제품, 화장품 산업이다. 모두 생물소재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바이오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2 유형은 3개 광역 자치단체에 각각 특화되어 분포되어 있는 산업으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이다. 이러한 산업은 기술적 연계, 가치사슬 또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이며, 업종 간 기술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3 유형은 2개 광역 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개 광역 자치단체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업,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이다. 두 지역 간 연구개발과 생산이 연계가능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앞서 말한 2가지 요건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은 제1 유형인 바이오 산업(BT)과 제2 유형인 첨단전자정보기기 산업(IT)이라 할 수 있겠다.

6) 충청권 지역전략산업

대전광역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산업, 생물산업, 첨단부품 및 소재 산업, 메카트로닉스 산업이다. 대전시에서 선택한 4대 전략산업은 산업전반의 근간이며, 타 성장동력산업의 부가가치의 증대와 파생시장의 규모와 이익이 큰 지식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충북은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이동통신산업, 차세대 전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충남은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표 11> 충청권 지역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주요사업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세계 크리스탈 교역전 개최
	자동차부품산업	첨단자동차부품 R&D집적화 센터 미래형 첨단자동차개발사업 지원	첨단자동차부품기술 연구개발사업
	첨단문화산업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설립 영상미디어사업화 지원센터	첨단 문화콘텐츠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농축산바이오산업	바이오산학협력단 인삼약초바이오식품 사업화지원센터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	바이오신약/장기, 기능성식품	바이오통합지원사업
	반도체산업	시스템 IC기술개발사업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육성
	이동통신산업	유비쿼터스네트워크 기술개발	이동통신단말기용 S/W지원
	차세대전지산업	전지소재부품개발	전지제조기술개발
대전	정보통신	u-IT839시장창출지원사업 IT CEO 전략커뮤니티 구축운영사업	차세대 이동통신 클러스터 조성 RFID/Ubiquitous 지원사업
	생물	바이오산업 선진화지원센터 설립 우수의약품 인증지원센터 설립	나노바이오 정보전자 연구센터 설립 건강기능성식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센터 설립
	첨단부품 및 소재	나노 종합fab센터 구축 차세대전지 신소재부품 성능분석평가 사업	차세대전지, 신소재 부품기술 연구개발 지원 나노 SoC개발센터 구축
	메카트로닉스	지능 로봇사업화센터 지능형로봇 표준화 사업	국가전략로봇개발 기술연계 사업화 전통/첨단기술융합 지원시스템 구축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필자 재정리

충청권에서 선정한 전략산업은 IT산업과 BT산업으로 특징지워지며, 대전은 모든 성장동력산업에 근간이 되는 산업을 선정하였고, 충남, 충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산업간 기술적 연계성이 매우 높은 산업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충청권 차원에서 지역적 연계를 근거로 계획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7) 산업집적시설

2004년 한국산업단지 총람에 따르면(<표 12> 참조), 충청권에는 국가지방산업단지 4곳과 48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면적은 총 88,791천㎡이며, 가동 중인 업체는 1,291개이며 종사자 수는 52,099명에 이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산업단지는 대전 제1,2,3,4산업단지와 국가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 제1,2 지방산업단지는 조립금속과 석유화학이 주 업종으로 입주해 있으며, 제3 지방산업단지는 조립 금속업종을 위주로 석유화학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제4 지방산업단지는 조립금속과 전기전자, 석유화학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다. 대덕연구단지내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정부 투자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벤처기업, 기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총 242개 연구 관련기관이 입주하여 23,000여명이 고용되어 있다.

충북에는 국가산업단지인 보은 국가산업단지, 오송 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와 20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 보은 국가산업단지는 화학류 산업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오송 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는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지방산업단지로는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창 과학지방산업단지와 청주 첨단문화 지방산업단지 등이 있다.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아산 국가산업단지, 석문 국가산업단지와 23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아산 국가산업단지는 기계, 가스, 자동차 관련 업종이 입주해 있으며,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임해공업단지로서 조성 중이다. 첨단 고도기술의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제작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천안 영상문화 지방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첨단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천안 외국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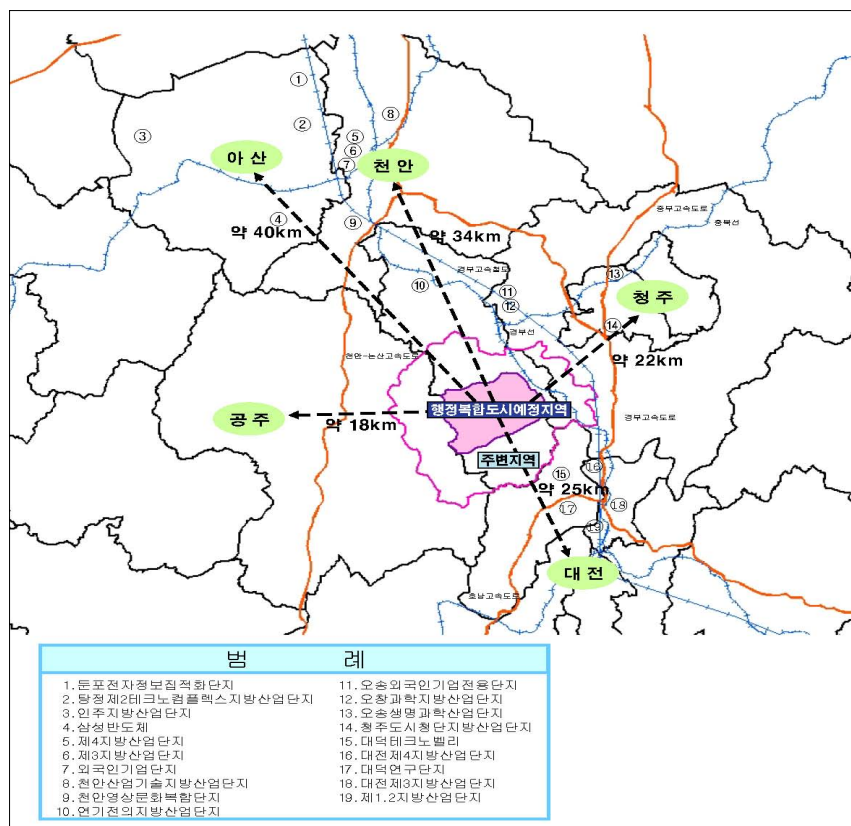
<표 12> 충청권 산업단지 현황

단지명		총면적(천㎡)	입주업체(개)		종사자수(명)	분양률(%)
			계약	가동		
지방	대전제1	479	72	67	1,837	100.0
	대전제2	777	63	58	2,366	100.0
	대전제3	1,234	87	80	4,304	100.0
	대전제4	1,900	190	180	5,243	100.0
	대덕테크노밸리	4,265	143	69	1,300	100.0
국가	보은	3,943	1	1	324	100.0
	오송생명과학	3,963	-	-	-	조성중
지방	청주	4,098	241	233	20,685	100.0
	청주제1	1,286	28	25	2,010	100.0
	현도	715	3	3	659	100.0
	부용	565	13	12	1,734	100.0
	대풍	435	6	6	473	100.0
	오창과학	8,644	108	77	6,343	90.9
	음성니트	135	3	2	14	100.0
	제천	1,195	51	8	352	84.0
	음성하이텍	399	6	1	60	100.0
	오창외국인	806	9	5	562	76.1
	금왕	571	3	1	60	100.0
	괴산	331	1	-	-	100.0
	이월	277	1	-	-	조성중
	맹동	419	-	-	-	조성중
	청주도시첨단문화	85	36	36	187	조성중
	충주첨단	2,015	-	-	-	조성중
	증원	343	-	-	-	조성중
	감곡	1,044	-	-	-	미개발
	증평	678	-	-	-	미개발
	단양신소재	3,46	-	-	-	미개발
국가	아산	11,528	269	159	7,356	99.3
	석문	10,872	-	-	-	미개발
지방	천안제1	359	28	22	687	100.0
	천안제2	823	50	48	4,389	100.0
	천안제3	841	4	3	4,389	100.0
	천흥	651	13	13	906	100.0
	마정기계	150	50	48	466	100.0
	조치원	950	13	12	1,035	100.0
	금산	872	1	1	1,913	100.0
	전의	492	9	8	716	100.0
	소정	270	2	2	302	100.0
	대죽	2,101	3	1	94	100.0
	인주제2	1,811	1	1	2,679	100.0
	논산	263	29	17	477	100.0
	월산	1,395	38	28	515	100.0
	천안 외국인	714	39	34	3,356	100.0
	인주 외국인	165	2	-	-	100.0
	인주제1	1,451	32	-	-	100.0
	관창	2,442	1	1	426	100.0
	서산	3,928	1	1	1,576	100.0
	탕정TC	2,467	7	3	2,404	100.0
	천안산업기술	183	25	25	641	100.0
	천안제4	1,020	-	-	-	조성중
	입암	327	-	-	-	미개발
	탕정제2	2,114	-	-	-	미개발
합계		88,791	1,682	1,291	52,099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총람, 2004. 필자 정리.

충청권의 산업단지의 입지적 분포 특성을 보면(<그림 9>참조), 총 52개 국가·지방산업단지 중 20여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 내에 입지하고 있다. 반경 40km는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로 교류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20개의 산업단지 내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전자정보기산업과 바이오 산업, 벤처기업들이 집중 분포하여 있고, 주변에는 대덕 연구개발단지를 비롯하여 4년제 대학이 대전, 천안, 아산, 청주시에 밀집되어 있어 고급인력과 기술을 상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 충청권 산업단지의 입지분포



자료 : 필자 작성

8)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기초한 창업기업으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대표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005년 충청권 벤처기업은(<표 13>참조), 총 891개로 대전이 410개로 46%를 차지하고, 충남이 257개로 28.8%, 충북이 224개로 25.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이 17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 제조업 108개,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83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82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 74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충청권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2005. 12. 31 현재)

업종	업체수			합계
	대전	충북	충남	
농업 및 임업, 어업	-	3	4	7
음식료품, 담배, 목재, 나무제품 등	12	25	24	61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	63	52	61	176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22	31	30	83
기계제조업	51	18	39	10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6	3	1	1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1	18	19	48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6	26	20	8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42	7	7	56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제조업	4	2	1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12	15	61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8	19	31
가구 및 기타제조업 및 재생재료가공처리업	3	2	5	10
건설업	3	4	1	8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1	-	1	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62	7	5	7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	1	-	3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	-	-	2
연구개발업 및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27	4	4	3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6	-	1	7
합계	410	224	257	891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합, 2005. 필자 재정리.

3.3 충청권의 지역과학기술 및 R&D 역량

1) 연구개발 역량

2002년 현재 전국의 연구개발 기관(<표 14>참조)은 총 7,324개로 이중 66.7%인 4,885개 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연구기관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에는 전국의 총 연구개발 기관의 11.7%인 866개의 기관이 소재하여 있으며, 이중 87.6%인 759개가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특히, 충청권 중 연구개발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대덕연구단지로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27.8km²(840만평)에 204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17개/6,314명), 기업부설연구기관(29개, 3,778명), 고등교육기관(4개, 2,401명), 정부투자연구기관(8개, 2,311명), 공공기관(9개, 455명), 지원기관(7개, 55명), 벤처기업(130개, 2,212명)등이 분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29개, 정보산업 80개, 에너지·자원 19개, 신소재·고분자 18개, 정밀화학 16개, 기계·해양·항공우주 13개, 표준·기초 7개, 교육·지원기관 22개가 입주하여 있다.

<표 14> 연구개발 기관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총계	
		연구기관	비율	연구기관	비율	연구기관	비율	연구기관	비율
수도권	서울	58	24.6	58	16.2	2,664	39.6	2,780	38
	인천	10	4.2	8	2.2	337	5	355	4.8
	경기	37	15.7	52	14.6	1,661	24.7	1,750	23.9
	권역계	105	44.5	118	33	4,662	69.3	4,885	66.7
경남권	부산	11	4.7	26	7.3	228	3.4	265	3.6
	울산	0	0	4	1.1	97	1.4	101	1.4
	경남	16	6.8	19	5.3	322	4.8	357	4.9
	권역계	27	11.5	49	13.7	647	9.6	723	9.9
경북권	대구	8	3.4	15	4.2	169	2.5	192	2.6
	경북	13	5.5	35	9.8	191	2.8	239	3.3
	권역계	21	8.9	50	14	360	5.3	431	5.9
전라권	광주	8	3.4	13	3.6	87	1.3	108	1.5
	전북	10	4.2	19	5.3	83	1.2	112	1.5
	전남	11	4.7	19	5.3	64	1	94	1.3
	권역계	29	12.3	51	14.2	234	3.5	314	4.3
충청권	대전	21	8.9	24	6.7	354	5.3	399	5.4
	충북	7	3	17	4.8	191	2.8	215	2.9
	충남	12	5.1	26	7.3	214	3.2	252	3.4
	권역계	40	17	67	18.8	759	11.3	866	11.7
강원·제주권	강원	9	3.8	16	4.5	57	0.8	82	1.1
	제주	5	2.1	6	1.7	12	0.2	23	0.3
	권역계	14	5.9	22	6.2	69	1	105	1.4
전국		236	100	357	100	6,731	100	7,324	100

자료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연구개발 자원 측면에서도 충청권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5>참조). 2001년 현재 충청권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총 28,354억 원으로 전국 총 투자금액의 17.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충청권 총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70.5%인 19,977억원, 충남이 17.6%인 4,994억원, 충북이 11.9%인 3,383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 역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41,916명을 확보하고 있어 전국대비 16.0%를 점유하고 있다.

<표 15> 연구개발 자원의 분포 현황

구 분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 인력	
		억원	비중	명	비중
수도권	서울	35,926	22.3	78,711	30.1
	인천	4,350	2.7	8,724	3.3
	경기	60,737	37.7	65,953	25.2
	권역계	101,013	62.7	153,388	58.6
경남권	부산	2,094	1.3	11,001	4.2
	울산	2,739	1.7	4,732	1.8
	경남	10,311	6.4	11,257	4.3
	권역계	15,144	9.4	26,990	10.3
경북권	대구	2,417	1.5	6,930	2.6
	경북	8,055	5.0	9,960	3.8
	권역계	10,472	6.5	16,890	6.4
전라권	광주	1,772	1.1	4,586	1.8
	전북	1,772	1.1	6,630	2.5
	전남	1,450	0.9	3,930	1.5
	권역계	4,994	3.1	15,146	5.8
충청권	대전	19,977	12.4	25,929	9.9
	충북	3,383	2.1	7,014	2.7
	충남	4,994	3.1	8,973	3.4
	권역계	28,354	17.6	41,916	16.0
강원·제주권	강원	966	0.6	6,318	2.4
	제주	322	0.2	1,154	0.4
	권역계	1,288	0.8	7,472	2.8
전국		161,105	100.0	261,802	100.0

자료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 주요 R&D거점

(1) 우수개발센터(ERC/SRC)

우수연구센터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능력을 집결하여 특정분야의 선도과학자 군을 형성하고, 대학간, 학제간, 산학간 협동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수준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8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국가차원에서 9년 동안 3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우수개발센터는 충남대에 2개 센터, 한국과학기술원에 9개 센터,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2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표 16> 우수연구센터 설치 현황

설치대학	선정	센터명	분야
충남대 (3개센터)	1999	급속응고신소재공학연구센터	재료공학
	1999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	신소재
	2002	형질전환복제배지연구센터	농수산
한국 과학기술원 (16개센터)	1991	분자과학연구센터	화학
	1999	분자설계및합성연구센터	화학
	1990	인공지능연구센터	전기전자
	1990	인공위성연구센터	통신·컴퓨터
	1990	생물공정연구센터	화학공학
	1991	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	재료공학
	1991	신형원자로연구센터	기계공학
	1994	광전자연구센터	통신·컴퓨터
	1997	미세정보시스템연구센터	통신·컴퓨터
	1997	기능성고분자신소재연구센터	화학공학
	1999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	통신·컴퓨터
	1999	인간친화복지로봇시스템연구센터	메카트로닉스
	2000	가상현실연구센터	통신·컴퓨터
	2000	연소기술연구센터	기계
	2000	전자패키지재료연구센터	재료공학
	2001	초미세화학공정시스템연구센터)	화학공학
	2002	스마트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환경
한국정보통신 대학교	2000	광인터넷연구센터	통신·컴퓨터
	2005	지능형RF연구센터	전기정보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2) 지역혁신센터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지역전략 육성분야 및 대학
강점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혁신역량을 높
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립되었다. 2005년 현재 충청권에는 총 22
개의 RIC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표 17> 충청권내 지역혁신센터(RIC) 현황(2005년)

주관기관	설치년도	특화분야	분야
한밭대	2004	첨단소재상용화	화학, 환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99	생물,의약	생물, 의약
충남대	1996	소프트웨어	전자
한남대	2003	민군겸용보안강화	전자
한밭대	1998	환경개선형신소재개발	화학, 환경
배재대	1999	바이오의약	생물, 의약
대전대	2005	난치성 면역질환	생물, 의약
주성대	1999	스피커음향기기	전자
영동대	2001	바이오 의약·식품	생물·의약
청주대	1998	정보통신	전자
충북대	1996	첨단원예기술개발	생물·의약
충북대	2001	생물건강산업개발	생물·의약
건국대	2003	바이오 식의약	생물·의약
(재)충남테크노파크	1999	기계전기전자부품 신가공기술	기계·조선
건양대	2002	원격계측	기계·조선
단국대	2001	전자부품검사자동화	전자
호서대	2003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	화학·환경
선문대	1998	공조기술	기계
호서대	1996	반도체제도장비국산화	전자
순천향대	2002	차세대BIT무선부품연구	전자
공주대	1999	자원재활용신소재	화학·환경
단국대	2001	의학레이저	생물·의약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필자정리

RIC는 센터마다 특성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의 실험·측정 장비를 구축·운영하고, 둘째,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며, 셋째,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제공 및 기술·경영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분야를 살펴보면, 대전은 생물, 화학, 전자분야, 충북은 정보통신 분야와 바이오 분야, 충남은 기계, 전기전자부품, 원격계측 등 전자부품 분야,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 반도체 장비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정보통신연구센터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사업은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SRC/ERC 사업은 주로 지원분야가 자연과학, 생명 및 기계공학 등으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육성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되었다. ITRC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충남대학교에 각각 2개의 연구센터가 있고,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내에 4개의 센터가 지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18> 충청권내 ITRC 현황

주관기관	설치 년도	특화분야	분야
한국과학기술원 (S/W프로세스개선센터)	2003	S/W 공학기술	S/W공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 (고성능 집적시스템연구센터)	2000	ASIC 설계	IT SoC
충남대학교 (전자파환경기술연구센터)	2002	전자파환경기술	테레매틱스
충남대학교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	2003	해킹, 바이러스 대응기술	정보보호
ICU (Grid 미들웨어 연구센터)	2001	Grid 미들웨어 기술	SW/디지털 콘텐츠
ICU (모바일 멀티미디어 연구센터)	2001	이동통신용 Ad hoc Network	차세대 이동통신
ICU (BcN 엔지니어링연구센터)	2004	BcN 엔지니어링 기술연구	BcN
ICU (IT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2001	IT융합기술저책	정책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필자정리.

(4)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소프트타운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은 벤처기업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정책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입지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은 정통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의 소프트타운은 1999년 설치되어 총 8개 업체 65명이 근무 중이며, 매출액은 42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충북은 1999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현재 40개의 입주실 중 28개 업체가 38개 입주실에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받는 업체의 매출액은 2004년 138억 2,700만원에서 290억 3,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9> 대전·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소프트타운 현황(2005년)

구분	지역 (설치년도)	입주실수	사용실수	입주기업현황		
				업체수	고용인력 (명)	매출액 (백만원)
소프트타운	대전('99)	20	20	8	65	4,22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충북('99)	40	38	28	253	29,031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필자정리.

(5) 지역혁신기반센터

충청권 내에는 그 동안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IT 관련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혁신기반 센터가 설립(<표 20>)되어 왔으며, 현재 디스플레이 지원센터, 영상미디어센터, 고주파부품 지원센터,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 등이 구축되어 있다. 이들 센터들은 고가의 공용장비를 구축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판로개척,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0> 충청권내 지역혁신기반센터 현황

센터명	주요기능	장비구축 현황	입주 기업
디스플레이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및 장비산업 육성 - 특성평가 장비 구축 - 실무중심의 디스플레이 기술 교육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디스플레이 R&D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측정, 특성평가, 신뢰성, 환경인증, 초정밀가공, 시험, 생산장비 등 32종 	6개 업체
영상미디어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영상제작 분야 특화 -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 - 공용장비 구축 및 활용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방음 및 흡음 시스템 등 142종 	24개 업체
고주파부품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측정장비의 공동 이용 -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고주파 부품관련 산업의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부대서 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반향실 등 45종 	부품기업(48개) 단말기업(35개) 시스템기업(23개) 기타기업(10개)
반도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장비 및 부품, 원재료 소자테스트를 통한 기업 생산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MI, ESD, HTST 등 소자 불량분석, 특성분석, 신뢰성 평가관련 장비 30여종 	전자정보부품 (3개 기업)

자료 : 충남전력산업기획단, 충청권 IT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2006.

3) 지역혁신네트워크

(1)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단위에 설치되는 법정기구로 지역 혁신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협의·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는 2004년 2월에 설립되어 기획조정, 인적자원개발, 전략산업, 과학 R&D 분과위원회를 두고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충북은 2003년 11월에 설립되어 지역산업, 지방대 육성 및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SOC구축 분과위원회를 두고 5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충남은 2004년 2월에 설립되었는데, 기획조정, 과학산업, 농업바이오, 문화관광, 지역인적자원개발 분과위원회를 두고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21> 충청권 지역혁신협의회 현황(2005년)

지역	창립일	분과위원회	사무국	위원수
대전	2004.02.18	- 기획조정 - 인적자원개발 - 전략산업 - 과학R&D	대전발전 연구원	36
충북	2003.11.17	- 지역산업 - 지방대육성 및 인력자원개발 - 과학기술 - SOC 구축	충북개발 연구원	58
충남	2004.2.24	- 기획조정 - 과학산업 - 문화관광 - 농업바이오 - 지역인적자원개발	충남발전 연구원	43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필자재정리.

(2) 테크노파크(네트워크 허브)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유기적 연계 및 혁신 주체들 간의 역할 정립과 네트워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7년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광주·전남, 충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로 지정되었고, 광역지자체별로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1998년 12월에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창업보육, 시험생산, 기술이전, 교육훈련, 정보지원, 지역혁신체계구축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법인이 설립되었고,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특화분야로 하여 설립되었다.

<표 22> 충남·충북 테크노파크 현황(2005년)

사업시행자	법인 설립일	참여기관수				특화분야
		지자체	대학	기업	기타	
(주)충남 테크노파크	1998.12	3	12	1	-	디스플레이·반도체 영상미디어
(주)충북 테크노파크	2003.12	4	10	48	1	BT IT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필자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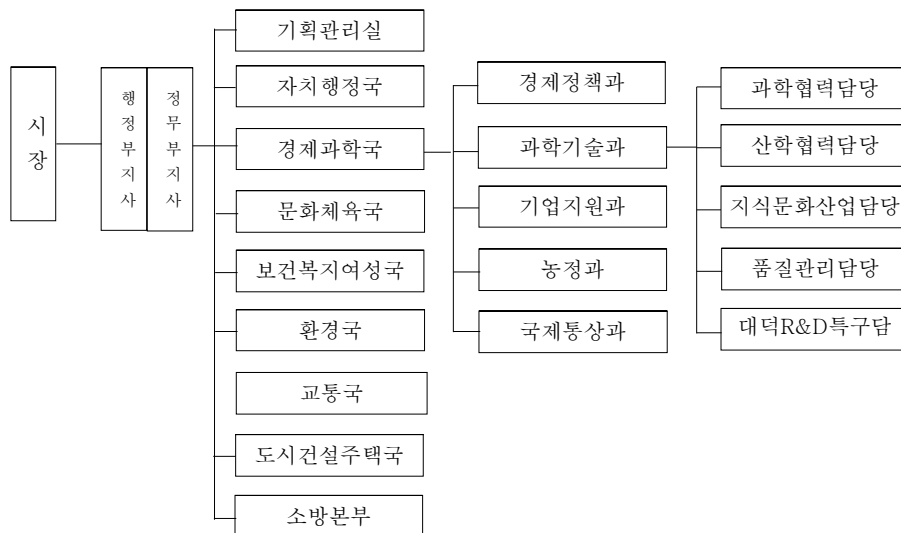
이노카페는 대학교수와 기업 관계자, 연구소 연구원, 지원기관 관계자 등의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비공식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산·학·연 만남의 공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전에는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충북에는 충북테크노파크 내에 이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충남에는 테크노파크 내에 네트워크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4) 행정조직

(1) 대전

현재 대전시의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은 경제과학국의 과학기술과에 과학협력담당, 산학협력담당, 지식문화산업담당, 품질관리담당, 대덕R&D특구담당 등 5개의 담당부서가 있다. 과학협력담당은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과학기술 육성 기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산학협력담당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지식문화산업담당은 게임파크, 지식재산권, 특허기술 관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관리담당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덕 R&D특구담당은 2005년 신설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0> 대전광역시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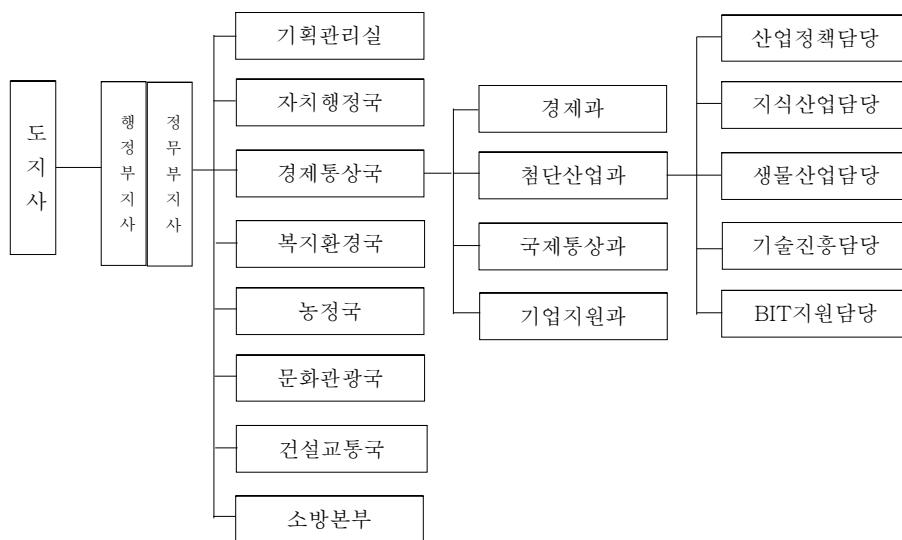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2) 충북

충청북도는 경제통상국내의 첨단산업과내에서 과학기술관련 업무가 주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산업과의 업무는 산업정책담당, 지식산업담당, 생물산업담당, 기술진흥담당, BIT지원담당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산업정책의 통합조정 및 관리, 신산업정책 및 추진전략·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이행, 새로운 산업의 발굴육성, 산업입지 지정 승인,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지원, 벤처산업 육성지원 및 기업의 정보화, 디자인·포장산업의 육성지원, 기업간 협력산업 육성지원, 전통공예산업의 육성지원, 생물건강산업 및 신소재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은 경제통상국내의 기업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중소기업육성시책수립 추진, 중소기업 사업 조정 및 통상정책,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1> 충청북도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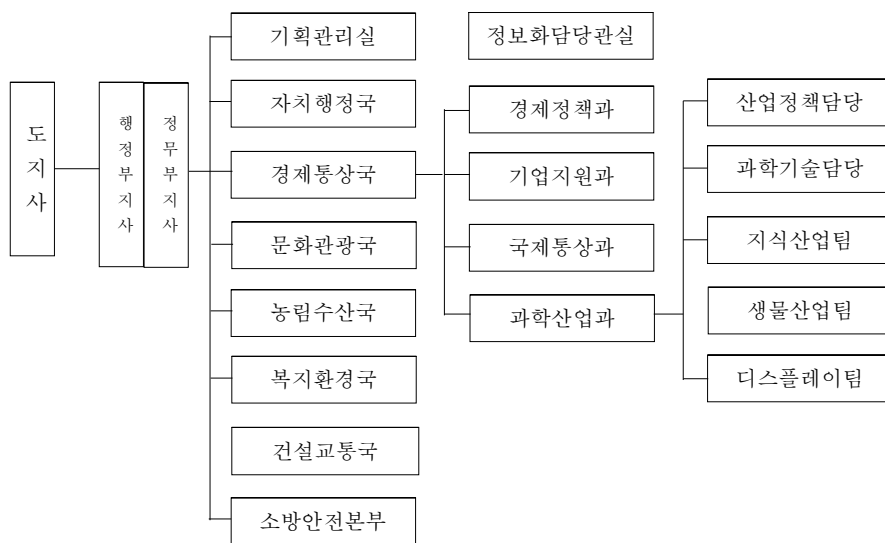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3) 충남

충청남도는 경제통상국 산하의 과학산업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관련된 육성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산업과는 산업정책분야, 과학기술분야, 지식산업팀, 생물산업팀, 디스플레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정책분야에서는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 지역전략산업 육성 추진, 충청권 산업클러스터 육성,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는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 나노팹센터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식산업팀은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도, 기술혁신센터, 충남기술거래소 설립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생물산업팀은 동물자원사업지원센터 설립 지원, 생명공학 관련 국책연구소 유치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디스플레이팀은 디스플레이협력단 구성운영, 나노기반 디스플레이 기술교육센터 설립 지원,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설립운영, 사이버게임 전국채전 지원 등을 맡고 있다.

<그림 12> 충청남도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도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3.4 충청권의 사회·경제적 문제점

여기서는 충청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충청권의 입지적 중요성은 환황해 경제권의 급부상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청권은 앞으로 국제교류와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금융,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기반이 부족하고, 국제업무, 대기업 본사 등 중추관리기능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청권은 인구 및 지역 내 총생산에 있어 전국 대비 10%이상을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대전은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고, 충남과 충북은 2차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 3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1차 산업은 감소하고 2, 3차 산업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이 대전과 천안, 아산, 청주, 청원을 중심으로 집중분포하고 있어 충청권은 대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 측면에서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층 인구의 비중은 낮고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장년층 인구와 5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구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충청권은 중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령인구의 부양이 그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충청권은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지역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대덕 연구단지 포함한 충청권의 연구개발 역량은 수도권 다음으로 높고, 충남과 충북에는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전자정보 및 바이오 전문산업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고, 전자정보 및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산업 분석에서도 바이오산업과 전자정보산업은 3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입지상 계수가 높고, 지역적으로 천안, 아

산, 청주, 청원, 대전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이들을 공동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덕연구개발 특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R&D의 성과확산, 상업화 촉진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취약했던 국제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IT산업 환경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과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의 독자적인 경쟁력과 대표성을 지닌 지역전략산업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산업간 연계 및 전략적 제휴체계가 미흡하여 global market을 가진 선도산업의 군집형성이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주체를 형성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정부간 협력에 관한 해외사례

4.1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정부간 협력체제와 협력사업

1) ABAG 개관

샌프란시스코만에 인접한 지방 정부들의 연합체인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는 토지이용, 주택, 환경개선, 그리고 경제개발과 같은 문제들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560여개의 지역계획 대행기구들 중 하나이다.

ABAG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카운티들과 도시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 기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시키고, 미래를 위한 계획과 지방통제기능들을 보호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다. ABAG는 9개의 카운티에 속한 100여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카운티들은 알라메다(Alameda),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마린(Marin), 나파(Nap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샌 마테오(San Mateo), 산타 클라라(Santa Clara), 솔라노(Solano), 그리고 소노마(Sonoma) 카운티(County)들이다. 이곳에는 약 7백만명의 사람들이 20,968km²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곳의 미래 교통망은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기과 수질오염을 통제할 것이며, 어떻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것인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수많은 정부기구와 민간기구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간의 협력된 행동 없이는 쉽게 조정되거나 달성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ABAG의 주요 기능들 중 하나는 타협과 화해를 통해 지방의 차이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과 공공의 정보제공 활동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과 정책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ABAG는 항만지역 지방정부 연합체로서 지역내 지방정부들 간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 광범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1년에 창설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항만 지역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발정책들과 경제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등 개별 지역사회들이 요구하는 공적 서비스들에 대한 광범위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수한 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었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ABAG가 설립되게 된다.

ABAG의 주요 기능은 회원 자치단체간 협력하에서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이 표방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ABAG는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개별 정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시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고자 인접한 정부들이 공동으로 하부기관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자연자원, 교통, 주택,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13> ABAG 영역



자료: <http://www.abag.ca.gov/overview/aboutbayarea.html>

2) ABAG의 구성 및 조직,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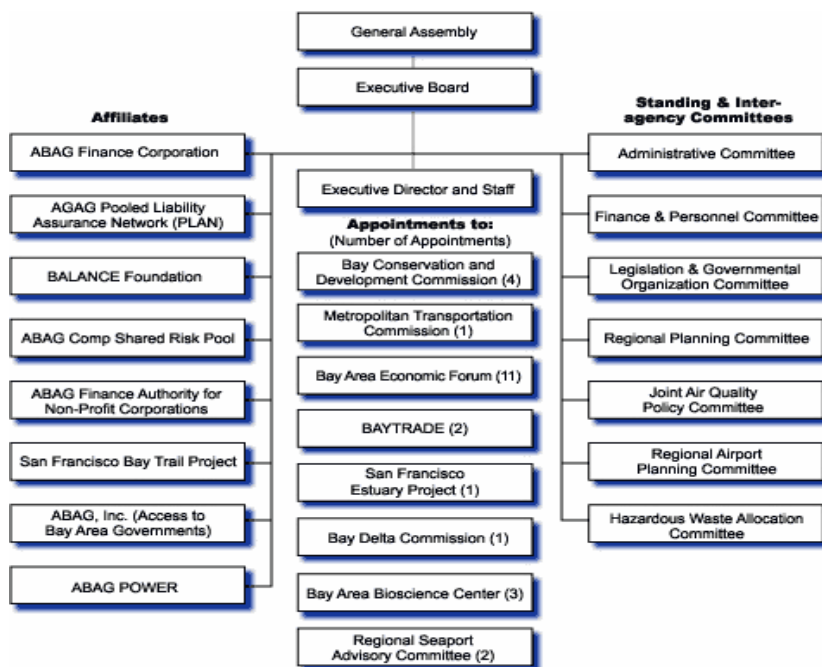
ABAG 이사회는 조직내 대부분의 기구들에 있어 일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각 회원 도시들과 카운티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대표하고 있다.

ABAG의 운영은 회원 도시들과 카운티들로부터 선출된 38명의 이사들로 구성

된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된다. ABAG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회원도시에서 무기명으로 선출된 위원들과 행정집행관들에 의해 선출된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석 수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의 인구수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

ABAG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광역도시 교통망위원회,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대기환경 관리국, 관련 위원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각종 위원회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진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집행기구들은 대기질, 수질, 에너지 자원, 그리고 경제개발과 같은 지역의 특수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일들을 감독하고, 지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임명되며, 모든 회의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그림 14> ABAG 기구



자료: <http://www.abag.ca.gov/overview/history.html>

ABAG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포괄적인 공적업무들을 계획하는 대행기구로써 주와 연방정부에 의해 관선적으로 지정되어 왔다. ABAG의 주요 역할은 지역의 주택, 경제개발, 환경, 교통망체계, 위락, 보건과 같은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지

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방차원에서 적절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ABAG의 회원도시들은 증가하는 서비스 비용과 매년 감소하는 세입예산 간에 민감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관계는 ABAG가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ABAG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는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와 자료분석 서비스, 재정지원 서비스, 사회보험서비스, 노동자 임금행정, 각종 회의 서비스 등을 회원 도시들에게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온라인상에 구현하도록 웹 그래픽, HTML 문서, 그리고 각종 안내 프로그램에 관한 특성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 ABAG의 사업영역

관계 업무영역	계획 중인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도시 및 카운티 -대학 -도서관 -전문 조직들 -지역의 공공업무 대행기구 -학교지구 -수송 -항만무역 -계약 및 입찰관계 -경제자료 구축 -직업창출 -환경보호망 구축 -지진대책 지도구축 -공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대책 -항만철도 -샌프란시스코 유입지역계획 -인구조사자료 및 추계 -인구센서스조사 -실리콘밸리 전망 -전자통신망 구축 -폐기물 통제수단 -인터넷 판매세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간 협력관계 -지역의 목표와 정책들 -지역 성장 -하부지역계획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항만 지역의 연합 -만지역의 다이옥신 계획 -자연친화적 사업 프로그램 -CALFED Task Fo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회의개최 및 지원 -재정지원 서비스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Hazmatschool.com) -보험 -노동자 임금 -각종 홍보자료 지원 -교육센터 운영 -인터넷 웹 서비스 지원

<http://www.abag.ca.gov>

ABAG의 관리구조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ABAG의 관리구조는 개개의 회원 도시들이 단일 투표에 의해 단일 대표성을 갖게 하는 거대한 대표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기구는 9개의 카운티와 100여개 도시를 상징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들은 지방정부 대표자들이나 카운티 대표자들이 모여 투

표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일반적인 회의는 예산 배정, 조례 수정, 현안 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제정 등을 위해 최소한 일년에 한번 이상 회의를 가진다. 일반적인 협의회 모임 중 사업들에 관한 부분들은 통상 짧게 끝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자 초대된 연사에 의해 프로그램 각 부분들이 진행된다. 주요 사안들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사안들은 관련 조항과 규정들에 근거하여 조율과 협의를 거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실행된다.

3) ABAG 계획활동

ABAG의 첫 번째 계획활동은 ABAG, MTC(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BAAQMD(Bay Area Air Quality District), 그리고, 도시(City), 카운티(County), 특별지구(Special District)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의 가장 핵심은 5년, 10년, 15년 단위로 거주지의 형태, 인구, 주택, 직업들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계획은 보통 2년 주기로 갱신된다. 이런 계획들은 교통계획이나 대기 및 환경에 관한 규정들로 발전시켜 ABAG, MTC, BAAQMD와 같은 기구들의 실행계획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들은 지방 정부나 민간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만일 항만지역 내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이를 환경국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건축행위는 ABAG의 계획 선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반면에 이에 순응하지 않는 지방정부라면 주의 법률을 따라야만 한다.

오늘날 ABAG의 계획수정 작업은 센서스 자료의 활용성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과거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계획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유용성이 떨어졌던 자료들이 차츰 개선되고 수정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유용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상황들은 공공, 민간 조직들로 하여금 센서스 자료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기관들의 예산비용을 절약하게 만들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지출하도록 만들었다.

ABAG의 두 번째 계획 활동은 집행부와 일반 의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지역정

책 중에서 해당 지역별 주요 현안문제들을 발굴하여 토론하는 활동이다. ABAG 집행부에서 제시하여 도출해낸 현안 문제 대부분은 지역계획위원회 내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이런 지역계획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비즈니스, 경제개발, 환경, 주택, 노동, 소수인종 문제, 위락공간, 특별지구 등을 대표하는 회원들과 각 분야별 9개 카운티로부터 추천된 관료들로 구성된다.

ABAG의 세 번째 계획활동은 일반적인 계획 하에서 특정 정책들을 보다 건전하게 개선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ABAG는 특정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위원회, 노동자들의 임금배상 문제, 신용불량자율을 고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건강 캠페인 등과 같은 것들로서 이런 연합 프로그램들은 ABAG로 하여금 추가적인 재원을 창출하게 하기도 한다.

4) ABAG 기능

ABAG는 앞에서 말한 정책과 개발활동들, 그리고 다양하게 구성된 민간과 공적 기구들을 오케스트라의 선율처럼 조합하는데 있어서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 없이도 가능하다.

ABAG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정의
- ② 현안 문제점들의 중요성 규명과 인식화
- ③ 현안 문제점들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
- ④ 해결대안들 간의 정책적 이점과 불합리한 점 파악
- ⑤ 지방, 지역, 주(州), 그리고 연방적 차원의 계획목표 및 정책대안들과 활동 프로그램들 간의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
- ⑥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와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정책과 프로그램 제시
- ⑦ 지방, 지역, 주 그리고 연방차원의 정부기구들과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책들에 대한 검토·분석 수행

ABAG의 이런 기능은 이해관계자들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된 기

구들,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들 간에 수직적 위계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관 간에 묵시적인 승낙과 협조체제, 그리고 각종 계획실행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창출을 기대하는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4.2 캐나다 밴쿠버 광역지역 정부 간 협력체제와 협력사업

1) GVRD 일반현황

밴쿠버 광역도시권지역 즉, GVRD(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는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이하 'BC주'라 함)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연합체이다. 1967년에 설립된 GVRD는 18개의 지방도시들과 3개(법인조직형태가 아닌, 그러면서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혼합형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밴쿠버 지역은 주(州) 인구의 1/2이 조금 넘는 2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지방정부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다. 이에 비해 밴쿠버 센서스 광역권 지역(Vancouver Census Metropolitan Area : CMA)은 GVRD 보다 조금 더 큰 범위를 갖고 있다. 이는 밴쿠버 지역이 2040년에 2백 5십만명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계획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GVRD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세 개의 다른 지방도시들(핏트 메도우, 맵플 린지, 맵스콰이)은 특별한 공공서비스(광역교통, 상하수도, 공원 등)에 의해서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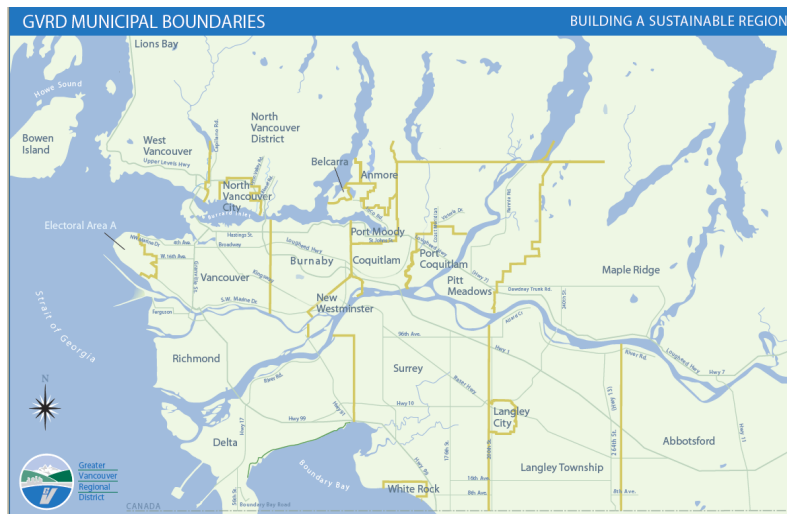
프레이저 퍼시픽(Fraser Pacific) 지역은 2010년에 2백 7십만명의 인구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현재의 밴쿠버 CMA 지역보다 조금 더 큰 지역이다. 이 지역은 로워 메인랜드(Lower Mainland)의 일부분과 브리티쉬 콜롬비아와 인접된 선사인 코스트, 노스 밴쿠버와 북서부 지역들, 그리고 휘슬러의 휴양지를 포함하고 있다.

GVRD가 아닌 인근 교외지역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GVRD의 서부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 인근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한편, B.C주 내에서 경작하기에 가장 좋은 토지들의 대부분은 로워 메인랜드에서 발견된다. 이 토지들은 주(州) 면적의 1/4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농장경영을 위해 가장 적합한 토지이다. 하지만 도시 개발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즉, 토지이용, 교통, 수자원 관리 및 보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책간 충돌의 잠재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즉, 토지이용, 교통망, 그리고 공원 및 개방공지정책과 같은 형태의 정책적 딜레마들은 밴쿠버 광역정부의 연구 및 정책개발의 형태이자 활동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 GVRD 영역



자료: <http://www.gvrd.bc.ca>

2) GVRD의 역사, 조직 및 기능 범위

밴쿠버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해결대안들이 1886년 도시간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20년 안에 나타나게 된다. 1911년, 밴쿠버에 인접해 있는 지방도시들로서 하수처리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포인트 크레이, 밴쿠버 남부지역, 그리고 버나비(Burnaby)와 같은 도시들은 지역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된다. 이들은 “협동적 대응체제의 진행”이라는 명제 아래 연구기금을 마련하였고, 1914년에 와서는 지방

정부의 하수국과 배수처리국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지역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지닌 기구들은 그 이후에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기구들로서 1926년에 설립된 벤쿠버 수자원국(Great Vancouver Water District; GVWD)과 1936-1948년의 보건의료국이 그 대표적인 기구들이다. 또한 1948년에는 로워 메인랜드 지역계획국(Lower Mainland Regional Planning Board; LMRPB)이 창설되었다. 아마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역 기구들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는 바로 LMRPB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벤쿠버 전체를 위한 지역지구 시스템은 당시 시장인 댄 캠벨(Dan Campbell)에 의해서 1965-67년에 만들어지게 된다.

GVRD 내의 지역들은 기능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기능상 위임된 지역들로서 지역의 일반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의료관리기능 까지도 포함한다. 벤쿠버 지역 내의 위임된 기능들로서는 수자원국과 오폐수처리국의 책임까지도 포함된다. 둘째로, 78개의 자발적인 기능들이 존재한다. GVRD내 각 지구는 기능 수행에 있어 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 기능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GVRD의 기능 또는 제공 서비스들은 크게 11개 분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GVRD가 제공하고 있는 11개 서비스들은 각각의 서비스별로 세부계획들과 추진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 예로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 수립은 ‘살만한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 마련과 구역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한 교통계획 수립, 지역경제정책 수립 등과 함께 지역별 성장 관리를 위한 인구 및 주거 밀도 조사, 지역별 특성 파악, 각종 통계자료 구축 및 활용, 보고서 발간, 지도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24> GVRD 제공 서비스

· 대기질 관리	·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 수립
· 지역공원 관리	· 상하수도 및 오폐수 관리
· 쓰레기 및 재활용	· 주택 및 주거지 개발
· 수자원 관리	· GPS 관리 등
· 응급의료호출시스템 및 수송체계 관리	
· 노사관리	

3) GVRD의 지역정책 사례

(1) 밴쿠버 광역권 교통망 계획

밴쿠버 지역의 교통망 계획은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초기의 대량수송 시기로, 1890년 전차기술의 발달로 시작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제 1, 2차 세계대전 당시인 트롤리 버스를 운행한 시기를 말하며, 세 번째 시기는 1960년대의 자가용 확대·보급시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의 공공수송체계 등장시기를 네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다. 밴쿠버 지역의 광역권 교통망 계획은 각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그 계획범위가 확대되어 졌다. 아울러 각종 계획들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기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권한 역시 강화되어 오고 있다. 네 번째 시기인 공공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망 계획 중심으로 밴쿠버 광역권 교통망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8년 연방정부는 교통문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지방정부 재정과 교통계획 모두를 관할하는 도시교통국을 창설하고 관련 입법조항을 신설하였다. 입법조항에서는 장관에게 지방 또는 지역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후 지방정부는 두 번째 기구의 창설을 공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밴쿠버와 밴쿠버섬에 위치한 인구 30만의 중도시인 빅토리아 중심 지역의 공공수송체계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운영회사(MTOC)이다.

1982년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지방 도시교통국은 B.C주의 교통국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기구들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B.C주 교통기구는 GVRD로부터 교통서비스에 대한 책임일부를 이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1983년부터 지방정부 대행기구인 B.C주 교통국은 로워 메인랜드 지역의 교통계획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

1983-86년, 캐나다 연방교통위원회는 밴쿠버 항구지역으로 향하는 위험물질의 이동통로인 철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하여 수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그 결과, 철도교통위원회 관할권 밖의 위험물질 이동에 관한 모든 형태의 광범위한 논의와 함께 로워 메인랜드 전역에 걸친 위험 물질의 수송에 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포괄적인 공공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밴쿠버 광역권의 위험물질 수송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를 진행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가 설립된다. 특별대책위원회는 B.C주 교통장관과 연방 교통국장이 의장이 되고, GVRD가 지방정부를 대표하게 된다. 이들의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위험물질의 수송체계에 대해 정책적인 조언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물질들의 이동에 관한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관련 계획을 지속시키는 방안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대책위원회는 4개의 분과 즉, 도로, 철로, 수로, 그리고 재난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응 및 처리방안 마련과 지역내 위험물질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모든 제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밴쿠버 지역의 위험물질 수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계획들은 해당 정부간에 광범위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교통정책 추진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간 협조는 3단계 정부협의회(연방, 지방, 그리고 지역 정부의 대표기구(GVRD)) 모두에서 동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진행과정은 약속된 협조체제 뿐만 아니라, 협조의 이행까지도 포함된다.

밴쿠버 교통장관은 “밴쿠버 지역을 위한 교통전략 마련은 납세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동시에 순차적인 경제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며, 양질의 환경을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교통문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의 1단계는 (1) 교통전략 구축, (2) 2001년 교통계획 수립, (3)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집행 주기를 위한 단기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등이다. 1단계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최초 문제가 발생한 지방들이 결정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단계에서 의도된 과업들 대다수가 2단계로 연기된다. 이것은 대책위원회들이 특정의 중요 논쟁들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연구 1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지역들과 다소 동떨어진 계획이 수립되어진다는 점이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책위원회의 한 구성원은, “데이터의 부적합”과 “세부실행단계에서 합의된 동의가 부족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곧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단계에서는 장기적인 교통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2단계 계획 전략들로는 항로, 철로, 그리고 수로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계획전략들 간의 연계성 조사와 함께, 토지이용 절차에 있어서 제시된 대안검토와 교통 네트워크 조성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프리웨이, 고속도로, 간선도로 또는 시도로 등을 활용하여 인근 도시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지방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계획이 되도록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연방, 주(州),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함께 이행할 수 있는 교통계획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광역 밴쿠버의 교통정책 시스템이다. 이것이 초기 정책에서 표명하고 있는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자 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1990년 GVRD의 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 시작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략(Livable Region strategy: LRS)은 원래 1976년에 시작된 GVRD의 LRS를 새롭게 갱신한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LRS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역 밴쿠버의 개발과 성장 속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1990년에 보완된 계획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지역의 다양성과 활력, 정당성, 효율성, 그리고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유지를 지향하고 있다.

(2) 토지이용계획과 공원관리 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GVRD의 토지이용계획은 1937년 로워 메인랜드의 토지이용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GVRD의 토지이용계획 범위의 일부분인 로워 메인랜드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1937년 당시 B.C주의 6개 지방도시들, 즉 밴쿠버, 버나비, 코퀴틀램, 포트 무디, 그리고 노스 밴쿠버 등은 로워 메인랜드를 위하여 자발적인 지역계획연합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49년에 설립된 로워 메인랜드 지역계획국(LMRPB)이다.

로워 메인랜드 지역계획국은 공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통하여 인근의 지방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정책들과 전체 지역을 위한 단일한 하나의 계획을 준비하

고,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지역지구제 형성 이후, 로워 메인랜드 지역계획국에서 추진한 지역 내 계획 활동들은 크게 5개의 분류형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 선거권으로 구분되어진 인근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1937년에 형성된 농업용 보전토지의 임차와 관련하여 정책적 의견과 조언을 B.C주 토지위원회에 제공하는 활동
- LMRPB의 지역계획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활동
- “살기 좋은 지역 프로그램(Livable Regional Plan; LRP)”을 개발하는 활동
- 지역 내 대중교통수송체계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과 아이디어 개발 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66년 공원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역공원계획 개념은 GVRD의 1976년 ‘살만한 지역계획(LRP)’의 일부분이 되었다. LRP의 목표는 급속한 인구 성장을 겪고 있는 벤쿠버 광역지역과 로워 메인랜드의 주요 중심가의 인구를 급격히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완화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 전략으로 도심지 밖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또 다른 중심성을 창출해내고자 하였다.

② 공원관리계획

GVRD는 교통문제에 있어서의 역할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의 공원 및 공개공지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자율성을 갖고 정책결정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공원과 공개공지는 GVRD의 가장 성공적인 기능 중 하나로서, 이것은 GVRD 구역 밖의 23개 지방 도시들과 선거권 지역들 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벤쿠버 광역권과 그 주변지역에는 16개의 공원들과 산, 강, 계곡, 농장, 해변의 동식물 서식지 등 약 10,000헥타아르 이상의 자연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GVRD의 공원 관리기능은 B.C주의 지역공원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의 목표는 로워 메인랜드 지역 거주자들이 요구하는 지역공원들을 완벽하게 운

영하고, 개발하는데 있다. 수년이 흘러 GVRD 공원관리기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과거 공익성 차원에서 지역 공원 서비스의 말단 역할을 해 오던 것이 용지의 취득, 계획, 개발, 그리고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까지 그 역할이 확장되게 된다. 이를 통해 GVRD는 로워 메인랜드 지역 전체의 녹지공간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녹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망은 광역권 지역을 구분 짓게 하였으며, 휴양·오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내 구역의 한계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역공원 관리 및 계획은 지역, 주(州), 때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행해지는 토지이용 정책결정체계 안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GVRD의 공원용지 관리는 밴쿠버 광역지역과 인근 지방의 모든 공원용지에 대한 개발, 유지·관리까지도 포함한다. 초기의 공원관리기구들은 공원관리를 위한 목적만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원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어 가면서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하수도과 같은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활동까지도 함께 다루게 되었다. 공원용지의 활발한 이용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공공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기능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림 16> GVRD 녹지공간



자료 : <http://www.gvrd.bc.ca/parks/CheckItOut/pdfs/gvrdmap.pdf>

GVRD 내의 공원 시스템은 주 정부에 의해서 초기 협력작업 형태로 추진되었던 LMRPB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공원과 공개공지에 관한 정책들은 1966년 지역공원계획에서 추구해 온 지역공원시스템 상에서 개발되어져 왔다. GVRD의 지역공원시스템은 GVRD의 녹지공간을 크게 공원지역, 공원예정지역, 공원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 강유역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이용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역 밴쿠버 지역은 공원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간의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밴쿠버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버나비(Burnaby)는 버나비 호수공원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GVRD와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한 예로, GVRD는 계획범위에 있는 공원 내의 모든 사유지를 구입하였고, 버나비는 GVRD 권역내의 버나비 호수지역 부지 대부분을 GVRD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5. 충청권 광역지자체 간 협력과 갈등사례

5.1 협력사례

1) 협력사례 1 : 충청권행정협의회¹⁾

(1) 개요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협의 차원에서 대전, 충남·북의 공동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과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충청권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해 1995년에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총 16회에 걸쳐, 대수도론과 행복도시 건설 과정의 대응전략 논의 및 공익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협의,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 등 대내외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2) 기능

충청권행정협의회의 구체적 기능을 협의회 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
-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시·도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충청권행정협의회 협력사업 내용은 송두범(2004: 47-50)과 대전시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상·하수도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신행정수도 관련 충청권 공동대응전략 마련
 - 그 외 기타 광역행정 개발 및 광역행정 상 필요한 사항
- 등을 협의회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3) 협력내용

2006년 9월 현재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총 16회에 걸쳐 81건의 협력과제에 대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중 56건은 협의회가 완료되었으며, 2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간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된 협력사업으로는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백제문화권 연계 관광루트 개발, 금강 살리기 충청권 공동 캠페인 전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동노력 등이 진행되어 왔다.

<표 25> 충청권행정협의회 협력 안건명

협의회명 (개최일시)	협 력 안 건 명	추진상황
총 계		완 료 : 56 추진중 : 25
충청권 행정협의회 제1회('96. 12. 9)	1.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완 료
	2. 백제문화권 연계 관광루트 개발	"
	3. 대청호 및 금강수질개선 공동대처	"
	4. 대덕연구단지 활용참여	"
	5. 대단위행사 적극참여	"
제2회('97. 3. 7)	1. 97 대전 첨단전자전 개최	"
	2. 청주국제공항 개항홍보 및 이용협조	"
	3. 97 국제환경포럼 개최	"
제3회('97. 9. 10)	1. 중부권경제활성화 전략 수립	"
	2. 국제교류·해외정보의 공유	"
	3. 수자원공사의 용수요금인상 공동대처	"
	4. 대전·충청물산전 공동개최	"
	5. 군서~산내간 관동도로개설	"
	6. 금강수질보전 공동대처	"
제4회('98. 11. 18)	1.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2. 대전·충청권지역경제 경쟁력 확보공조	"
	3. 산학연관 연구개발 협력체제 구축	"
	4. 국책사업 유치관련 공동협조	"
	5.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
	6.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대책 공조	"
	7. 대전·충청권 관광사업 연계 추진	"
	8. 대전·충청권 환경보전활동 강화	"
	9. 국제교류·해외시장 공동개척	"

협의회명 (개최일시)	협 력 안 건 명	추진상황
	10. 대전·충청권 공직자 유대강화	"
	11. 대전·충청권소방학교 공동운영	"
	12.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구성	"
	13. 수도권정책 관련 공동대처	"
제5회('99. 3. 29)	1.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발족	"
	2.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	"
	3. 대전~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가시화	"
	4. 오창~병천간 4차선 확포장	추진중
	5. 옥천~대전간 관동도로 조기완공	완 료
	6.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공동개최	"
	7. 지방발전촉진법 제정 추진	"
제6회('99. 12. 23)	1. 대전 시티투어(City Tour) 확대협조	완 료
	2. 중부권 내륙화물기지건설 공동추진	"
	3. 제4차 국토계획 「중부내륙축」 하향조정	완 료
	4.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개최	"
	5.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활용	"
제7회('00. 6. 29)	1. 대전 사이언스 2000페스티벌 개최	완 료
	2. 2000년 대전발명특허 유통박람회 개최협조	"
	3. 유성~천안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 추진	추진중
	4.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완 료
	5. 가축전염병 예방 및 처리 공동 대응	"
	6. 환경 행정 협조체계 구축	"
	7. 대전·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집행체계 구축	"
	8. 금강 살리기 충청권 공동 캠페인 전개	"

협의회명 (개최일시)	협 력 안 건 명	추진상황
제8회('00. 12. 20)	1. 금강하류 수질 보전 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중
	2.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완 료
	3.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확정·추진	"
	4. 산불 감시원 인건비 국비 지원	"
	5.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표식방법 개선	"
	6.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해외 자매결연단체 참여	"
제9회('01. 3. 28)	1.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
	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
	3.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촉진 노력	"
	4. 대전·충청권 첨단기술산업벨트 구축	"
	5. 시립 예술단 교류공연	"
	6. 대전·충청권 대중교통통합카드시스템 구축	"
	7. 대전·충청권 관광마케팅 공동 추진	"
	8.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해외자매결연단체 참여	"
제10회('01. 11. 21)	1. 수도권집중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 촉진	"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
	3. 중부권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추진중
	4. 대전·충청권 대학 축구대회 창설	"
	5. 관광 해외세일즈활동 공동전개	완료
	6. 청주공항 활성화위한 도로 확·포장	"
	7.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
제11회('03. 1. 17)	1.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동 노력	완 료
	2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구간연장 및 조기건설 건의	"
	3 대전~청주간 경전철 사업 조속 착수 추진	"
	4. 전자교통카드 지역간 호환사용 추진	추진중
	5. 「Bio산업」 공동협력체제 구축	"

협의회명 (개최일시)	협 력 안 건 명	추진상황
제12회('03. 9. 5)	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충청권 공조 재천명	완 료
	2. (가칭)「충청선」철도 조기건설 추진	"
	3. 「중국인을 겨냥한 관광마케팅」공동 추진	"
	4.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기 건설」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허가 공동 건의	완 료
제13회('04. 2. 4)	1. 「신행정수도 건설」충청권 공조강화	추진중
	2. 수도권 규제완화 점진적 시행건의	완 료
	3. 충청권광역교통망 조기추진 건의	완 료
	4. 청주공항을 활용한 충청권관광 활성화	추진중
제14회('04. 6. 21)	1.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현안사항 공동대처	추진중
제15회('04. 8. 13)	1.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충청권공동 대응	추진중
	2.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민·관 협력 사업 추진	추진중
제16회('04. 10. 22)	1.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결정에 따른 대책 및 공조	추진중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2006.10)

지금까지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 또는 협력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산업경제, 관광, 사회간접자본, 교통, 하천 및 환경 등 일반행정에 관한 모든 사업 부문들을 협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협력된 내용 중에는 선언적·상징적 협력 및 일회성 행사로 전략 가능한 협력 내용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협력사업 대부분은 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송두범, 2004:62). 이와 같이 재정이 수반되는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광역 및 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재정투자 결정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 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협력사례 2 : 충청권 광역관광벨트구축사업

(1) 개요

대전과 충남·북 3개 시·도는 충청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관광벨트사업은 충청권의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엮어 광역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2004년 3월 구성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관련 공무원, 관광협회, 항공사, 공항공사 관계자 등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기능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충청권 광역관광벨트 구축 및 공동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광역관광벨트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역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일환으로 협의회는 관광객 유치에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업비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팸-투어(fam-tour) 개최, 청주공항 국제노선 증설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관광 홍보물 제작, 해외관광설명회 등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 또는 추진하는 한편, 해외 관광객 유치전에 함께 나서고 있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공동 관광상품 개발,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생산적 축제 육성, 백제문화권 공동네트워킹 구축,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 신규 축제 개발 및 리모델링 등을 세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3) 주요 추진내용

충청권관광벨트구축사업 일환으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2005년에 중국인 대상으로 공동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2006에는 중국여행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산세계인삼박람회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는 한편, 중국국제여유교역회 충청권 공동홍보관 운영, 충청권 관광안내지도 공동제작 등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및 그 역할은 관광객 유치에 위한 협의 정도에 그치고 있고, 관광시설 투자협의 및 시설투자계획 조정 등 충청권 광역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사업 추진 및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 충남·북 3개 시·도 관계자와 관광협회장, 한국관광공사 충청권 협력단장 등이 모여 충청권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충청권관광발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한편, 충청권관광벨트구축사업 일환으로 일본 및 중국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활용방안이 중요하게 인식되게 되었다.

1997년에 개항된 청주국제공항은 김포국제공항으로부터 165km,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250km, 군산공항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 호남선 등 간선철도와 경부, 호남, 중부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가 분기되는 전국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전 정부청사와 인접해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오창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수도권 교통 혼잡에 따른 물류기지로서 지정학 상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299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해, 심양, 장사, 울란바토르 등 4개의 국제노선이 개설되어 있다.

그간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은 실질적인 국제공항의 역할을 수행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3개 시·도는 대전 150만명, 충북 140만명, 충남 200만명의 잠재고객을 흡수하지 않고는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도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용객의 25%가 대전시민이다.

이는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증설이 그 만큼 대전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은 공주와 부여 등 백제의 고도를 찾는 일본 관광객의 유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란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충청권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청권 3개 시·도 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들은 정기 모임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항공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6년 일본 구마모토를 잇는 주 2회 항공노선이 신설되게 된다.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일부 노선이지만 기존의 4개 노선을 합쳐 주 18회 36편의 6개 국제노선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3개 시·도는 앞으로 탑승률의 60%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일본의 구마모토 역시 마찬가지이다.

향후, 충청권 3개 시도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해 3~4개의 신규노선 취항도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천공항과 차별화된 중·단거리 국제노선 개발, 일본 거점 및 중국 특화 공항으로의 개발, 그리고 저비용 항공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5.2 갈등사례

1) 갈등사례 1 :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분기점 결정

(1) 개요

1987년 당시의 노태우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처음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부선 고속철도로부터 호남선 고속철도가 나뉘어지는 지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충청권의 3개 지방자치단체는 심하게 대립해 왔다. 충남은 천안을 지지하는 데 비해, 충북은 오송, 대전은 대전을 각각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2005년 5월 그 분기점이 충북 오송으로 지정된 이후까지 계속되어 온 바, 지역간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1987년 호남선 고속철도의 건설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와 1994년 문민정부가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을 때에는 대전을 분기점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1994년 중반 이미 확정된 노선을 변경하여 천안을 분기점으로 지정,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호남선 고속철도가 천안-익산간 충남의 낙후지역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오송을 지지해 오던 충청도가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2002년 국민의 정부 말에 이르기까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호남권 및 중앙 정부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8일 충남도지사는 “지사직을 걸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 노선을 막겠다”고 했다. 그에 대응하여 충북도지사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가 경제적 논리나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면 (충남지사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측은 “지사직을 걸겠다는 발언은 경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러한 공적 문제가 지자체 대표자간 감정적인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이러한 갈등 속에서 건설교통부는 1995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나 자치단체간 과열된 경쟁으로 같은 해 12월 그 용역사업을 중단하고 2005년 5월 약 70명에 달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한 다음, 분기점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호남선 분기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분기역의 선정결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남선 고속철도 분기역의 유치는 단순히 지역개발적 차원만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유치위원회 등 각 지역별 사회단체까지 이 문제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여론 또한 매우 민감한데, 각 지자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는 국가 간선 교통망이 경부축에 집중돼 있어 서해안권과 백제권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천안분기점은 오송분기점에 비해 총 노선의 연장이 21.1km가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11분 30초가 짧아져 운행할 때 연간 2700억 원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청도와 대전시는 오송분기점 노선을 택할 경우 오히려 14km를 단축시켜 3350억원의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과 오송은 영·호남권, 태백권과 연계돼 교통의 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과 충북의 주

장이다. 이들은 “정부 대전청사와 청주공항 등 국가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라도 오송-대전 박정자 지역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강원권도 지지하였다.

(2) 대전시의 주장

대전은 대전시와 충남 공주시의 경계 지점인 박정자에서 논산과 목포로 이어지는 노선을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전을 분기점으로 할 경우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구간의 길이가 69km로 가장 짧은 반면, 오송을 분기역으로 할 경우 89.9km를 신설해야 하고, 천안으로 하면 98.6km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또한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데 따른 문화재 훼손이나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대전으로 분기역을 정할 경우 가장 적다고 주장했다. 대전으로 분기역을 정할 경우에는 공사구간 내 문화재의 수가 64개인데 비해 오송으로 할 경우는 105개, 천안으로 할 경우는 163개로 훨씬 많다는 것이다.

즉, 호남고속철도는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사업으로 신선 건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송-익산은 대전-익산보다 20.9km의 신선을 추가로 부설해야 하므로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또 대전이라는 국토중심 도시권에의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호남고속철 운행편수가 1/3 이상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호남지역 철도 이용객의 편리성이 떨어지고 철도공사의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천안이나 오송 분기점은 영남과 호남간 철도교통이 지금보다 불편해져 지역화합을 저해시키는 한편, 지난 백년동안 구축된 호남-대전 지역간 유대를 약화시키는 대신 대전권-영남의 유대를 강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대전이 분기점이 되면 대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즉, 행복도시는 대전에서 2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바, 이는 지하철, 경전철 등의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 분기점은 오송이나 천안 분기점으로 우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통이나 계룡산 관통 등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을 목적지로 하는 호남 지역민들에게 고속철도 이용에 대한 매력을 향상시켜 철도공사측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또한 비록 대전이 분기점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오송과 천안은 어차피 경부철, 호남철이 모두 통과하는 정차역이 되어 불편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림 17> 경부고속철도 노선 및 건설 현장 모습



그래서 대전의 이익을 대표하는 한 시민단체인 “도시정책포럼”은 2002년 2월 25일자 성명서를 통해 고속철도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가 중추교통망으로써 이용효율의 극대화와 국민들의 편리성, 경제성의 확보차원에서도 광역대도시의 관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단체는 고속철도가 중소도시를 통과해서는 안되며, 지역균형개발은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충남도의 주장

충남은 천안 분기점을 주장하는 바, 천안이 분기역이 될 경우 호남고속철의 목포-서울 총 연장이 324.84km인데, 오송이 분기역으로 될 때에 총연장은 343.81km로 거리가 18.97km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분기점을 천안으로 하면 ‘목포-서울’간 총 운행시간은 89분이 소요되지만, 분기점을 오송으로 하면 93분이 소요되어 약 4분 정도 더 걸리게 되고, 현행 고속철도 요금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 볼 때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갈 경우 천안을 경유할 때보다 2,914원(1인 편도)의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충북 오송을 분기점으로 할 경우에 더 늘어나는 18.97km에 대한 건설비용은 km당 고속철도 건설비용이 일반지역은 411억원, 도심지역은 592억원이 소요

된다고 할때, 추가 건설비용이 7796억~1조 12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의 난이도 측면에서도 선형 상태나 문화재 (천안 분기역 301곳, 오송 분기역 321곳), 교량구조물(천안 50곳, 오송 72곳) 등을 고려하면 오송 분기역 공사가 천안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충남은 또한 호남선 분기점을 오송으로 할 경우 호남고속철이 계룡산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4) 호남의 주장

전북과 전남의 호남지역인들은 호남고속철도의 실제 이용객으로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은 이용객의 편의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 천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충남, 대전과 직접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전북은 대전을 선호하는 여론과 천안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분기점으로 대전을 선호하는 이들은 천안을 분기점으로 할 경우, 영호남간 철도교통이 더 불편해지며, 이용객이 많지 않아 노선의 흑자운영을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고 한다.

이들은 만약 천안이 호남고속철의 분기점이 된다면 천안-대전간 기존 고속철 노선의 이용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익산까지 신설 노선에 대한 투자비 증대로 철도적자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천안에서 익산으로 직접 통과함으로써 노선이 단축되는 데 따른 시간비용과 요금절약은 대전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용객이 줄어 차량의 운행빈도가 줄어져 호남권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호남선 고속철의 경제성을 저감시켜 국민의 세부담도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천안에 분기점을 지정함으로써 경부축과 구별되는 수도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기호축을 구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충청의 중심이자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인 대전과 영남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호남은 그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호축 구축은 기호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대신 대전-호남이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경제, 사회적, 인적 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전북인이 소리 높여 주장하는 천안분기와 기호축 철도 구축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5) 충북도의 입장

충북도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과 발표 직후부터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하고자 여당 의원들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고, 인접 강원도와 대구 경북지역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오송역 유치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청주시의회 측에서는 “여당 당적을 가진 모든 의원들의 당적탈퇴와 의원사퇴도 불사하겠다”(99년 12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당적을 탈퇴한다”(2000년 1월 충북도의회 자민련 소속의원) 하면서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6) 최종 결정

2005년 6월 30일,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호남선 분기역 선정에 관한 용역과제를 중단하고 전국적 규모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거기서 분기역 지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대전광역시, 충남·북 등 3개 지자체에 각 3명의 대표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하여 건교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되는 “분기역 평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국토계획, 교통,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의 학회에서 추천한 8인, 국토연구원 부원장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 선정위원회(24인)”를 구성하였다. 또한 추진위가 5개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는 한편,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추천(각 5인)한 전문가로 “분기역 결정 평가단(75인)”을 구성하였다. 평가기준 선정위원회는 1)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 2) 교통성, 3) 사업성, 4) 환경성, 5) 건설의 용이성 등과 같은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를 가장 중시하여 33.28%의 비중을, 그리고 “사업성”에는 12.23%의 비중을 두도록 하였다.

한편,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리서치엔리서치란 회사가 2000명의 일반 국민들과 2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대전을 선호한 응답자가 53.9%, 천안아산을 선호한 응답자가 33.3%, 오송을 선호한 응답자가 1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수도권 응답자들 가운데 천안아산을 선호한 이들은 51.0%, 대전을 선호한 이들은 40.0%, 오송을 선호한 응답자들은 9.0%로 각각 나타났다. 강원권 주민의 경우 대전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46.5%, 오송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30.2%, 천안아산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23.3%로 나타났다. 충청권 주민의 경우 대전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36.0%, 오송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33.1%, 천안아산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30.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남권의 경우 대전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57.0%, 천안아산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39.1%, 오송을 선호한 응답자들이 4.0% 등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월드 전화조사, 2005년 2월 17일, 조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표를 설정하고, 선정위원들이 2박 3일간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충남, 대전, 호남권 대표자들이 최종 선정과정에서 이탈하여 총 75명 중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이 지지해 온 충북 오송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천안을 지지했던 호남권과 대전을 주장했던 대전시는 비교적 크게 반발하지 않았으나, 충남도는 반대성명과 성토가 강력하게 이어졌다. 충남도는 분기역 선정추진위원회의 위원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역환경단체 등을 동원하여 계룡산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평가과정상 의혹을 제기하였다. 오송분기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된 논리는 천안분기역보다 거리가 더 멀고 운행시간도 길어서 요금을 더 내야하고, 건설비용이 더 들어가는 가 하면, 호남고속철도의 주 이용자인 호남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7) 건설교통부 측의 주장

이 문제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천안을 분기역으로 했을 경우 건설비용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충북 오송은 행복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행복도시와의 접근성은 호남지역민 뿐만 아니라 향후 호남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기업들의 대행정부 민원처리 등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행복도시와의 접근성은 오송 6.6Km, 대전 19.2Km, 천안 32Km로 오송이 가장 유리하며, 이것이 오송분기역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오송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국토정책, 환경, 선형 및 시공기술 등 제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천안은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돼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천안 분기점은 수도권과 연담화 및 집중을 초래,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될 우려마저 있다. 그런데 오송은 호남에서 행복도시 접근성뿐만 아니라, 국토 X축 철도망 체계 구축으로 충북선을 통해 충주~원주~강릉까지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국토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오송 분기역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녹지자연 7등급 이상 통과지역이 오송은 6개소로 천안과 대전 각 9개소보다 적어 환경훼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송 분기역은 곡선 반경 5,000m 미만의 구간이 3개소로 대전 4개소, 천안 4개소 보다 적고, 종단경사 15~25%인 구간도 1개소에 불과하여 대전 7개소와 천안 4개소보다 훨씬 적었다. 20m이상 절토를 해야 하는 구간도 오송분기역 대안은 3개소로 천안의 11개소와 대전의 4개소에 비해 적고, 10m이상 성토할 구간도 오송은 없으나, 천안 1개소, 대전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측은 분기역 결정과정은 정부로부터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은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3단계의 별도 조직체계를 갖춰서 최종적인 평가를 했다. 분기역 평가추진위원회는 충청권 3개 지자체에서, 평가기준 선정위원회는 12인의 추진위에서, 분기역 결정 평가단은 15개 시도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기했다는 것이다.

2) 갈등 사례 2 : 대청호 물사용 권한에 관한 대립

(1) 개요

대청호는 금강 수계를 막아 생긴 인공호수로 1975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시작하여 1981년 6월에 완성되었다. 대청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청호는 저수 면적이 72.8km², 호안의 길이가 80km, 저수량은 15억 톤, 댐의 길이가 495m, 높이는 72m이다. 4대 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개발된 이 댐은 대전권(60만톤) 및 청주권(41만톤) 공주 등에 하루 101만톤의 생활용수를 278만명의 인구에게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대청댐은 대전시 대덕구와 충북 청원군 사이에 놓여 있다. 이름도 대전의 '대(大)'자와 청원군의 '청(淸)자'를 따 '대청댐'이라 이름 지었다. '대청호'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 규모의 호수로 금강유역의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이는 한편, 대전광역시 및 충남북 지역주민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주요 지천은 서화천, 봉황천, 남대천, 영동천, 초강천, 보청천, 옥천천 등이 있고 유역면적은 4134km², 유로 연장은 251km, 총 저수용량은 14억 9천만m³, 유효 저수량은 7억9천만m³, 발전시설용량은 9만kw, 년 평균유입량은 28억3천만m³이다.

(2) 갈등 양상

그 동안 대청호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주민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충청권 3개 지자체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대청호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식수원 확보가 최대 관심사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청호의 수질이 해마다 악화돼 온 터에 상류에 용담댐을 막은 뒤로는 물 유입량이 줄어들어 대청호의 수질이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해 왔다.

따라서 수질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동 지역 내에서 각종 행위제한을 하였다.

<표 26> 대청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구분	대청호
규제 대상지역	충북 3군11읍·면 대전 1구 (729km ²)
I 권역	436km ²
II 권역	293km ²

공장 등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4월부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과 낙동강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등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90-7, 개정 제94-47호)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또한 2중으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바,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차 사진처리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용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립이 제한된다.

수질보전 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며 종합대책으로 시행되며 이로 지정된 대청호는 대전시 대덕구 1 개구와 충청북도 3개 군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 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되며, 1권역의 규제내역이 더 까다롭다.

이러한 법적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은 대청호 상류 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주로 충청북도 옥천군, 청원군, 보은군과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각종 생산활동 및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음식점의 개업, 공장의 설치, 축산업의 시행 등에 대해 많은 규제가 되고 있는 바, 특히 옥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 중 75%가 이러한 규제로 인해 각종 경제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대청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행위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충청북도와 대청호의 수질보호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하류지역 주민을 주로 대변하는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간에는 갈등이 있어왔다. 그런데 2000년 법 제정 직후 그러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3) 정부의 대책

결국 그러한 문제가 대청호뿐만 아니라 한강수계, 낙동강 수계 등에서도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대청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장래의 용수부족 및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 2001년도에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12개의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탄강댐 등 일부지역의 댐건설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대 등

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법 개정안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규모를 100% 증액하고, 댐 주변지역에 친수 레저시설, 생태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비를 수자원공사 등 댐 건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댐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건설이 완료된 기존의 댐에 대하여는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제거나 경감을 위한 도로·교량건설, 침수지 보상 등의 댐 관리사업을 반영·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댐 관리기간 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댐을 이용한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댐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댐 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지역정서상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던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댐건설기간 중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개정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여 댐을 친환경적, 주민 친화적 시설로 변화시키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놓고도 지자체별로 많은 갈등이 있어 온 바, 주 내용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사업, 정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보다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혹은 중복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또한 댐 상류지역 지자체들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편, 댐 하류지역의 지자체들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행위가 대청호 수질을 해치는 사업을 경계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는 정부지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민원으로 나타나는 바, 대전광역시 및 충청북도의 관련 지자체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고, 그들이 수자원공사측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아래 표들과 같다.

(4) 지자체들의 입장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현재의 대청호 주변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은 댐 담수구역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주변지역을 포괄하여 광역적으로 개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확실히 한 다음, 개발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및 환경오

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청호 관광루트 개발에 있어 첫째, 지자체간 시설의 중복 방지, 둘째,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 등을 주장한다. 2003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는 자연생태관을 건립하고 있는 바, 수자원공사측이 계획하고 있는 대청댐 물문화관 건설사업은 유사한 시설이므로 시설을 차별화하든지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충청북도 청원군은 문의면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고, 댐 상류지역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에게 청남대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군은 문의문화재단지 앞 음악분수를 설치할 것을 희망하는데, 수자원공사측이 대청댐에 설치하고자 하던 계획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군은 또한 이미 조성된 문의문화재단지와 관련된 관광시설이 보다 채류형이 될 수 있도록 관광기반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옥천군은 물 이용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를 비교할 때 규제사항은 동일하나 보상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주민 지원사업도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자원 오염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청북도는 대청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총량적 관점에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 발전계획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27> 지자체 관련 민원 현황

민원사례		주요 민원내용
청남대 개방	민원	- 군사보호구역 및 경호지역 축소로 어업구역 확대 -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방하여 관광객 유치
	조치	- 방호구역 축소시 어로행위 등의 수면사용 인허가 협조 - 군사보호 및 경호지역 축소로 어업구역 확대, 개방하여 관광객 유치
팔각정 휴게소 소유권 이전	민원	- 팔각정 휴게소 전체의 소유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전
	조치	- 매점은 입찰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임대 운영하므로 조건없는 소유권의 완전이전을 불가 - 문의지역단체 등에 우선 임대하는 방안은 단체들간의 갈등과 공평한 임대기회 제한에 따른 민원 및 다른 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
문의체육공원 확대	민원	- 기존 문의체육공원 3천평을 9천평으로 확대하거나 신규 설치
	조치	- 규모(저수용량 감소), 유수소통 지장, 수질오염 등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존시설 확대방안을 긍정적 검토
청주 취수탑 이전	민원	- 댐 하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물 공급과 규제완화로 개발여건 마련
	조치	- 현재 취수탑 주변 수질을 고려할 때, 이전 필요성은 없으며, 대청댐 광역 II단계 완공(2003년 예정) 이후에는 하류 조정지 댐내의 취수탑은 생활용수 시설로, 기존 본 댐 내의 취수탑은 농업·공업용수 취수시설로 연계 이용하는 방안 검토
취수탑 주변 수상 분수대 설치	민원	-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중폭기 작용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취수탑 주변 수상분수대 설치 요망
	조치	- 현재 수중폭기장치, 조류유입방지막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중이고, 비용확보 측면에서도 추진이 어려움(제천시의 경우 충주댐 내에서 자체 비용으로 기 설치·운영중임) -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하고, 댐운영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광시설이므로 수공 사업비 투자 곤란 및 타 지역에도 동일한 요구가 많아 파급효과에 따른 부작용 예상
문의문화재단지 확대	민원	- 현재 조성된 문의문화재단지(3만 3천평)를 확대(건의)
	조치	- 문화재단지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 현재 문의종합발전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용역중이므로 용역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요재원을 파악, 물이용부담금, 국비(특별교부세), 지방비 등 단계별 재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청원군, 충북도, 행자부, 환경부 등) - 청원군에서 기본계획 수립, 정부차원에서 협의 추진.

대청호 관광특구 지정	민원	- 대청호지구를 국민관광특구로 지정 건의
	조치	-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
양성상 유적지 복원	민원	- 옛 일모산성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양성산성과 연못을 복원하여 문 의지역을 문화관광명소로 조성
	조치	- 청원군의 문화재 지정 신청시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를 결정(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시 청원군의 복원정비계획을 검토, 국비지원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정화시 설 확대	민원	- 남계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건의
	조치	-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한 후 국고지원등을 통해 사업추진(청원군, 충북도, 행자부)
환경정비구 역 지정	민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규제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일부 규제완화 요망
	조치	- 청원군이 환경정비계획 수립·신청시 적극 검토하여 지정(충북도)
행운의 다리 설치	민원	- 문의 선착장~상장리간 행운의 다리를 설치하여 인근 문화재단지와 연계한 관 광객 볼거리 제공 등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B=3.0m, L=650m, 사업비 150억여원)
	조치	- 관계 부처간 협의, 설치 결정시 댐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작 물 설치 허가 검토
대청댐 유휴지 호안공사	민원	- 문의 소재지 만수위 부근에 옹벽설치(고은~신탄진간 도로 시공시 병행)하여 녹지·부영양화 방지 및 성토지 체육공원 활용
	조치	- 향후 도로서형 협의시 댐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 - 체육공원은 기존시설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청소년 수련 활동 수면 구역 지정	민원	- 수상활동 가능지역으로 지정 요망(3만평 정도) : 교육의 장으로 활용
	조치	-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불가능하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검토
문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	민원	- 체계적인 개발로 문화와 관광이 진흥되도록 종합계획 수립·시행(건의)
	조치	- 현재 용역추진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용 역결과를 토대로 문의발전 대책 추진(청원군)

자료 : 대청댐관리단 내부자료(2003)

<표 28> 주민집단 관련 민원현황

민원사례		주요 민원내용
주민 생계 대책 마련	민원	- 각종 생활규제에 따른 피해조사 및 생계대책 마련 건의
	조치	- 피해조사는 지금까지의 사례나 타 지역과 형평성, 조사주체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으므로 수용곤란 - 물이용 부담금 이용 지원확대 -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소득사업 확대
팔각정 휴게소 소유권 이전	민원	- 팔각정 휴게소 전체의 소유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전
	조치	- 매점은 입찰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임대 운영하므로 조건없는 소유권의 완전이전을 불가 - 문의지역단체 등에 우선 임대하는 방안은 단체들간의 갈등과 공평한 임대기회 제한에 따른 민원 및 다른 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
유보 택지 환원	민원	-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환원 지역을 주민들에게 환원(건의)
	조치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 검토·추진(청원군)
고은삼거리~ 신탄진간 4차선사업협의	민원	- 공사 노선결정시 주민과 사전협의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요망(건의)
	조치	- 노선계획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노선선정(건교부) - 자전거도로는 고은삼거리~문의간 우선시행(건교부)
미천 2,3,5리 도시계획 정비	민원	- 문의초등학교 우측지역 택지개발사업 후 분양 및 초등학교 입구 주차장 설치, 문의 중학교 우회도로변 지목변경(田→垵地) 건의
	조치	- 택지개발 및 주차장 설치는 현행법령상 불가능
일용 시장 복지 회관, 화장실	민원	- 일용시장내 복지회관 및 화장실 설치 건의(1층은 시장, 2·3층은 복지회관 등 다목적으로 사용)
	조치	- 충청북도에서 예산지원방안 적극 검토(충북도)
피해 지역 주민 보상	민원	- 수요자로부터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을 문의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건의
	조치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이 통과되면 주택개량, 학자금 등 지원계획 수립·추진(환경부)
문의 주민 식수 대책	민원	- 상수원 지역임에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청댐 광역상수도 공급에 소요되는 사업비 특별지원 요망
	조치	- 내년부터 2004년까지 최대 50억원(교부금 25억원 포함) 지원(환경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민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문의면 전지역으로 확대 건의
	조치	- 내년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전국 동일 기준에 의거 처리(농림부)
농업 용수 관로 설치	민원	- 대청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받아 수리안전담이 될 수 있도록 농업용 수관로 설치요망 건의
	조치	- 청원도수로(문의면 북쪽)에서 총 15km의 관로를 연결설치(농림부)
마을 회관을 위해 저수구역내 부지 사용	민원	- 현 마을회관은 규모가 협소하고, 부지도 개인이 마을 위해 임시로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마을회관 건립부지 필요(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647번지, 545㎡(165평))
	조치	- 옥천군과 협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시 마을회관 건립방안 설득
청마리 교량 설치	민원	- 대청댐 수위상승시 침수되는 가덕세월교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익 사사고가 발생하므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거나, 우회 도로설치를 요구
	조치사항	- 댐 건설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민원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자자체에 적극 건의하고, 교량을 설치할 경우 댐저수구역 점용허가 등 적극 지원(수공) -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청동마을에서 말티마을까지 6km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계획 투자순위에 의거 개설토록 함(충북도)

자료 : 대청댐관리단 내부자료(2003)

6. 충청권 광역 경제체제 구축방안

6.1 기존 행정협의회 의 성과

도시문제,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조절하는 방식에는 정부 간 협약, 혹은 계약, 행정구역 통합, 광역권 계획, 행정협의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1965년부터 행정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접지역 간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조정, 협의해 왔다. 1966년 8월에 개최된 전국 시장회의에서 내무부가 시달한 “도시권 행정협의회 설치요강”에 따라 1960년대 말까지 대구, 광주, 수도권을 비롯한 15개 지역에서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조성되었다. 1973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1975년에는 “행정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규칙”을 공포하였다 (배준구 2001).

그래서 1998년까지 총 54개의 행정협의회, 즉 광역도시권 5개, 시와 군 간에 구성된 연담도시권 2개, 기초 도시권 47개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총 1,158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협의회당 연평균 약 2.8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의 경우 5개 광역행정협의회 중에서 단 1개의 협의회만 회의를 가졌고, 기초 행정협의회는 49개 중에서 23개 협의회에서 4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6개 협의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행정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준구 2001).

충청권에도 1995년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결성되어 1996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1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거기서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청주국제공항 개항 홍보 및 이용협조 등과 같은 안건이 82건 상정되어 82건 합의되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06). 그러나 거기서 구속력 있는 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드물고, 또 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안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협의회는 주로 이해관계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1999년부터 “충청권 발전협의회”란 명칭을 가진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추진하였으나 이 협의회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2006년 말까지 이 행정협의회는 5.13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 혹은 성과를 확산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등으로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06년 5.13 지방선거 결과, 위와 같은 경향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5.13 지방선거의 결과 중부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선 후 실제로 회동을 갖고 관계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뒤, “충청권 광역 경제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전 지역 간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문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이러한 합의의 결과로 2006년 7월부터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조직을 갖추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러한 약속의 결과로 기존의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10월부터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일본의 관광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중국 상하이 국제 여유교역회(CITM)에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전을 추진하였다(대전내일 2006년 9월 5일 10면; 대전일보 2006년 11월 15일 2면, 참조).

또한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는 시·도간 연계강화를 통해 취약한 기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소규모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원의 중복 및 과잉투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초광역 클러스터 사업”이란 정책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와 충청남북도가 속해 있는 중부권은 전략산업기획단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IT산업에 관해 지역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의회에서도 유사한 협력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2003년 5월 30일 청주

관광호텔에서 충청북도 의회의 주관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지원을 위한 “충청권광역의회 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와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내 지역간 유치경쟁이 과열될 경우 오히려 반대론자들의 행정수도 이전 불가주장에 명분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2003년 4월 8일과 14일 충남도의회에서 충청권 광역의회의장들이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결정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발표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충청권 광역의회 공조 합의문"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3개시도 광역의회별로 설치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의 임의적 협의체로서 협의회의 실무적 사항 처리를 위해 광역의회 특위위원장 및 간사 등 6인으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협의체 운영계획 협의, 행정수도 이전 지원 충청권 광역의회 협의회 협의서 서명이 있었으며, 6월에 행정수도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충청북도의회는 협의회 출범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충청권의 공조 강화는 물론 주민간의 신뢰와 화합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원은 물론 500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당부하였다.

6.2 광역경제권 사업제안

이러한 호의적 분위기하에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제시하자면 1)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2)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효과적 발전을 위한 지원, 3) 대수도론 등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공동 대응, 4) 충청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 특화 및 역할 분담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업 등인데, 각 사업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

현재 정부는 2012년부터 이전대상 기관의 입주가 시작되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앞으

로 정권이 바뀌면 계획이 수정, 혹은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해서도 충청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행복도시의 건설이 충청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충청권이 협력하여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충청권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발굴하고, 그를 관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 경제체제를 구축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

2004년부터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다가 참여정부의 초기에 대덕연구단지는 더 이상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대덕밸리 벤처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바, 2004년부터 1차 목표연도인 2014년 경, 그 동안의 성과가 평가되어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충청권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바, 이 문제도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특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자원을 대전권에 집중시킴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문제는 충청권내 지방자치단체도 타 지역과 같은 입장에 있는 바,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충청권 광역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선을 발굴하고, 그에 기초하여 충청권내 지방자치단체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수도권에 비대화에 따른 공동 대응

수도권의 혼잡과 비대화는 현재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고 수도권과 여타 지방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현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충청권은 국가의 수도권 정책으로부터

반사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는 경제특구가 이미 지정되었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간 “대수도론”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충청권은 이러한 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4) 지역 간 경제구조의 특화 및 역할 분담체제 구축

충청권은 동일 문화권이나, 사회경제적 현황을 볼 때 시도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전은 사실상 전 지역이 도시화되어 있고 연구개발 및 행정, 교육,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농업과 제조업이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충북은 이와 크게 대조된다. 또한 대전은 개발가능 여지가 사실상 고갈되었지만 충남과 충북은 그렇지 않다. 충남과 충북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충남은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역동성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청양, 서천 등 남부 해안 및 내륙지방은 매우 침체되어 있다. 충북은 청주와 청원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농업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충남과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서 충청권내 시도간, 시군간 경제구조를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바, 산업구조를 다양화시키는 한편, 중복 투자를 줄이고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역할 분담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력이 집중해 있는 대전은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산업화하고, 이를 권역내로 파급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생물산업의 연구개발기능과 신소재 관련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사업화 기능과 공동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는 광역 경제권의 거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충북·남의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부문간 연계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충청권의 광역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 산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도출되고, 셋째,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주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 거점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세세분류의 유형 중 제1유형과 제2유형이 광역적인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지리적 근접성과 전후방 연관산업군으로 묶여있는 가이다. 이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2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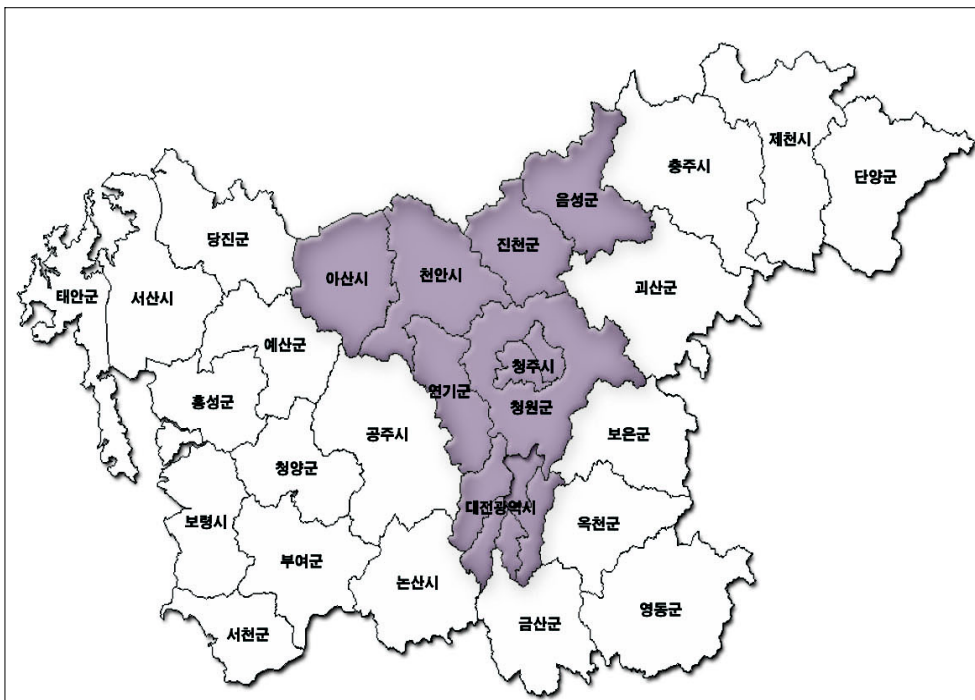
충청권의 IT산업별 집적지를 분석한 결과(충남전략산업기획단 자료참고), 디스플레이의 경우 천안, 아산, 연기, 음성, 진천군으로 나타났고, 반도체는 대덕, 천안, 아산, 연기, 청주, 음성, 청원군으로 나타났다. 통신기기 및 부품의 경우는 천안, 아산, 연기, 음성, 진천, 청원군으로 나타났으며, S/W콘텐츠는 대전시 대덕, 유성, 서구와 충북의 청주시가 집적지로 나타났다. 즉, 충청권의 IT산업 집적지는 천안, 아산, 진천, 음성 등 중부고속도로 주변과 천안, 아산, 연기, 대전(대덕/유성)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나타났다. 충청권 IT산업 집적지는 3,800km², 인구 300만 규모로 실리콘밸리, 루트 128, 캠퍼리지테크노폴, 밀라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광역적인 클러스터로 성공한 지역의 사례와 유사한 규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네트워킹 및 수평적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협력한다면 세계적인 IT산업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9> 세계적 광역클러스터의 규모

구 분	중심지역	면 적(km ²)	인구 (2002년 말기준)
실리콘벨리	산타클라라카운티	3,883	230만명
루트 128	보스톤	3,496	302만명
캠브리지테크노폴	캠브리지	1,830	71만명
밀라노	밀라노	1,982	370만명
바덴뷔르템베르크	슈투트가르트	35,752	1,060만명

자료: 노근호, 2005. 중부권 산업클러스터의 연계효과 및 대안모색.

<그림 18> 충청권 IT산업 집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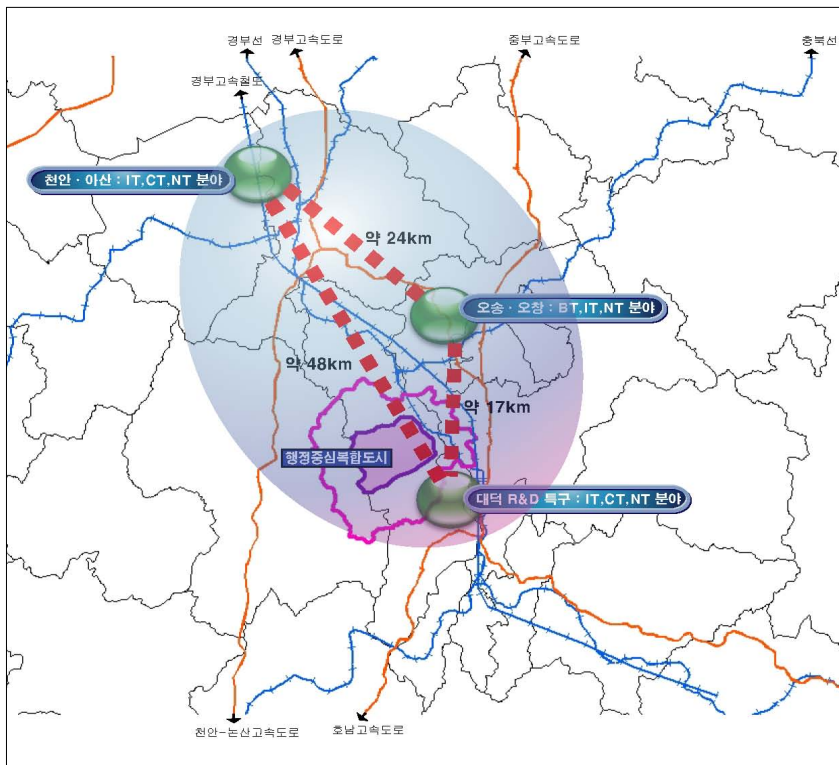


자료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청권 IT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2006.

이 권역을 충청권의 핵심 클러스터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4+4산업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대전을 IT-BT 중심의 R&D 거점으로 하여 천안·아산, 청주·청원을 스포크형으로 연결하는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구축이 그것이다.

우선, 허브클러스터는 대덕 R&D특구와 오창·오송간 BT분야 기술개발 및 생산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대덕 R&D특구와 천안·아산간은 IT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Super Corridor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각 지역에서 Spin-Off된 벤처기업과 유관산업의 집적지를 조성하고, 3개 권역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에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겸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 초광역 R&D클러스터 구축전략을 제시하면 <그림 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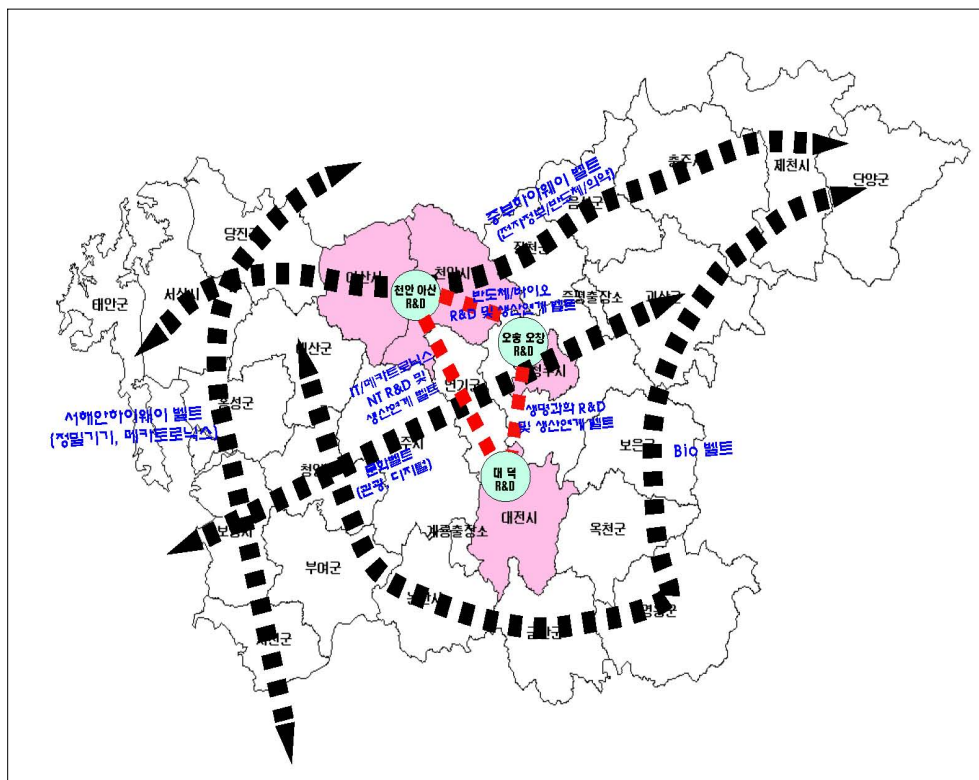
<그림 19> 충청권 R&D클러스터조성 구상도



자료 : 전영노, 충청지역혁신의 과제와 전망, 2005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5.

그리고 허브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이를 거점으로 4+4산업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1축은 서산~당진~천안·아산~제천~음성~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전자정보·반도체산업의 중부하이웨이벨트, 제2축은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등 서해안하이웨이벨트, 제3축은 예산~청양~논산~금산~제천~영동을 연결하는 바이오산업 벨트, 제4축은 보령~공주~청주~괴산을 잇는 디지털콘텐츠 산업벨트가 그것이다. 4+4 산업벨트 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 20> 충청권 4+4산업벨트조성 구상도



자료 : 전영노, 상계서, 2005.

5)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구축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존의 행정협의회는 지난 4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항구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1) 조직체계의 정비

효과적인 광역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우선 기존의 행정협의회를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행정관료”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관료들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의중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와 의견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약한다. 이는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장이 다르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의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기업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서로 다른 주장들을 조정하는 역할, 혹은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 전략산업기획단, 각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는 물론, 상공회의소 등 기업가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현재 구성되어 있는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합하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구성원의 신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지역혁신”이나 “광역행정”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나 행정협의회와는 별도로 “충청권 경제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새로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문제와 “도시계획”문제까지를 포함하여 3개 시도의 장기적 비전을 도출하는 정도의 역량이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독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환경, 토지이용, 수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이 지역의 미래상과 지역별 특화방향

등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며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ABAG, 캐나다의 GVRD, 독일의 RVR 등이 바로 그런 기구이다. 이들은 주 정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설립된 반 독립적 기구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들이 계획한 교통, 환경, 경제 등과 같은 특별한 과제를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협의회는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너무나 빈약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외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한편, 지역간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직 아래 경제, 토지이용, 광역 교통체계, 환경 등과 같은 전문적인 과제를 취급하는 분과별 조직이 있어야 한다.

(2) 예산과 인력 확보

어떤 조직이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상급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금, 상급 정부가 제공하는 과제별 예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인 세원을 활용하여 광역 협력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와 같은 경우에는 광역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주로하고,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자체적인 세원을 갖는 것이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세법의 개정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인력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경우 독자적인 인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직, 즉 각 지방의 연구원과 행정관료, 전략산업기획단, 혹은 테크노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원을 파견을 받아 전임 직원으로 구성된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영국의 중앙정부 지방 사무소 (예: Government Office of East England)와 같은 조직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BAG, GVRD, RVR 등과 같이 독자적인 기구를 갖고 자체적으로 충원한 인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영주. 2006. 광역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대전충남 경제연구회 발표자료 (12월 6일, 대전광역시, 한국은행 대전지점).
- 강황선. 최병대. 2001.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건설부, 1994. 釜山慶南圈 廣域開發計劃(案).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국토개발연구원. 1992. 광역도시권 설정과 관리에 관한 연구,
- 김석준. 2000.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김용웅. 1995a. 외국의 지역계획 및 개발동향 (해외출장 보고) 국토정보. pp. 33-39.
- 김용웅. 1995b. 외국의 지역계획제도 특성 비교 : 영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 김용웅. 2001.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방향, 이정식.김용웅(편저) 『세계화와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총서③ 한울 아카데미, 475-503.
- 김용웅. 2005.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간 상생협력토론회 자료집.
- 김정렬. 2000.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21~39면.
- 대전광역시. 2006. 내부자료.
- 대전내일 (신문). 2006년 9월 5일 10면.
- 대전일보. 2006년 11월 15일 2면.
- 대청댐관리단. 2003. 내부자료.
- 박양호 외 2000. 「지역개발 투자협약제도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 박우서. 2001. “지역발전과 민관협력형 지역거버넌스 구축”.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 배준구. 200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1); 45-55.
- 송두범. 2004.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지역협의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이만형 외 5인. 2003.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 이병수. 2000. 지방정부와 NGO 간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 조건에 관한 연구 - 의정부시 공무원과 NGO 활동가들의 의식, 태도, 경험을 중심으로.
- 전영노. 2005. 충청지역혁신의 과제와 전망, 2005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 차미숙. 2001. 정부간 분쟁의 발생실태와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연구: 지역개발 분쟁을 중심으로.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2006. 충청권 IT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www.kosis.nso.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4. 한국산업단지 총람.
- 한국행정연구원. 2002.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방안」
- 홍준현. 2000.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
- 한승준. 2006. “지방정부간 관계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수도권교통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253~276
- Cooke, P. 1998. "Introduction: Origins of the Concept," in H. J. Braczyk; P. Cooke; and M. Heidenreich, 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London: UCL Press. pp. 2-25.
- Danson, M., Hill, S. and Lloyd, G. 1997. Regional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Research in Regional Science 7. London: Pion.
- Heinelt, H. 1996.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Structural Funds." in Heinelt, H. and R. Smith(ed.). Policy Networks and European Structural Funds. Aldershot Avebury, pp. 9-25.
- Hooghes, L. and Marks, Gary. 2001. "Types of Multi-Level Governance: What? Where? Why?." In paper of Conference entitled "Multi-Level Governanc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vThe University of Sheffield.
- Hoppe, Robert; Henk van de Graaf; and Asje van Dijk. 1987.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sign: Problem Tractability, Policy Theory, and Feasibility Testing.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53: 581.

- Innes, J. E. and S. Connick. (1999). "San Francisco Estuary Project," in L. Susskind, S. McKernan and J. Thomas Larmer (Eds.),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A Comprehensive Guide to Reaching Agree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Innes, Judith E. Innes and David E. Booher. 2003. *The Impact of Collaborative Planning on Governance Capacity*.
- Innes, Judith E. Sarah Connick, Laura Kaplan, and David E. Booher. 2006.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CALFED Program: Adaptive Policy Making for California Water*
- Innes, Judith E.; Sarah Connick; Laura Kaplan; and David E. Booher. 2006.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CALFED Program: Adaptive Policy Making for California Water*
- Jessop, B. 1995. The regulation approach, governance and post-Fordism. *Economy and Society* 24. pp 307-34
- Kommunalverband Ruhrgebiet (KVR). 1995. *Kommunalverband-Ruhrgebiet. Wege, Spuren*. Essen.
- Kommunalverband Ruhrgebiet (KVR). 2001. *Das Ruhrgebiet*, Essen.
- Leach, Robert and Janie Percy-Smith. 2001. *Local Governance in Britain*. Palgrave
- McGee, Terry. 1999. "Governing Mega-urban Regions: the Case of Vancouver," in John Friedmann, ed., *Urban and Regional Governance in the Asia Pacific*, Institute of Asian Research, UBC, pp. 115-126.
- McGee, Terry. 1999. "Governing Mega-urban Regions: the Case of Vancouver," in *Urban and Regional Governance in the Asia Pacific*, ed., John Friedmann, Institute of Asian Research, UBC, pp. 115-126.
- Meligrana, John. 2004. "Toward Regional Transportation Governance: a Case Study of Greater Vancouver," *Transportation* 26: 359-380.
- Meligrana, John. 2004a. *Redrawing Local Government Boundaries: An International Study of Politics, Procedures and Decisions*, Vancouver, Canada: UBC Press.
- Meligrana, John. 2004b. "Toward Regional Transportation Governance: a Case Study of Greater Vancouver," *Transportation* 26: 359-380.

- Pallagst, Karina. 2006. Growth Management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Interdependence of Theory and Practice,
- Peter, John. 2001. Local Governance in Western Europe. London: SAGE.
- Pierre, J. 2000. Introduction: understanding governance, in J. Pierre(ed), Debating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essman, Jeffrey L. Aaron B. Wildavsky, 1973. Implementaton: How Great Expectations In Washington Are Dashed In Oaklan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rojektRuhr Gmbh. 2003. Arbeitsergebnisse der ProjektRuhr Gmbh, Essen.
- Regionalverband Ruhr (RVR). 2005. *Das Ruhrgebiet-Entdeckungen mitten in Europa*, Presseinformation, Mai Essen.
- Rhodes, R. A. 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Rhodes, R. A. 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Rosenau, James. 1992. "Governance,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in idem and Czempiel(ed.).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pp. 1-29.
- Rosenau, James. 1992. "Governance,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in idem and Czempiel(ed.).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pp.1-29.
- Rothblatt, David N and Victor Jones. 1998. 'Governance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 Revisited', in Donald N. Rothblatt et Andrew Sancton (dirs), *Metropolitan Governance Revisited : American/Canadian Intergovernmental Pespectives*, Berkeley : Institute for Governmental Studies Press, University of California, pp. 407-459.
- Rothblatt, Donald N. and Andrew Sancton. 1993. *Metropolitan Governance: American/Canadian Intergovernment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ncton, A. 2001. "Canadian Cities and New Regionalism," *Journal of Urban Affairs* 23 (5): 543-555.
- Shaw, Ronert. 2002. "The International Building Exhibition (IBA) Emscher Park, Germany: A Model for Sustainable Restructur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10(1): 77-97.
- Shin, Dong-Ho, 2000. Governing Inter-regional Conflict: The Planning Approach to Managing Spill-overs of Extended Metropolitan Pusan,

- Ko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3): 507-518.
- Shin, Dong-Ho, 2004. "Confusing Responses to Regional Conflicts: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Korea," in John Meligrana, ed. *Fighting Over Local Government Boundaries: An International Study of Politics, Procedures and Decisions*, Vancouver, Canada: UBC Press. pp. 172-188.
- Shin, Dong-Ho. 2000. Governing Inter-regional Conflict: The Planning Approach to Managing Spill-overs of Extended Metropolitan Pusan, Ko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3): 507-518.
- Smith, Heather A. 2003. Planning, Policy and Polarisation in Vancouver's Downtown Eastsid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phie* 94(4): 496-509.
- Stoker, G. 1996.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Mimeo. Department of Government, University of Strathclyde
- Stoker, G. 1997.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urban governance, in G. Stoker (ed.). *Partners in urban governance: European and American Experience*.
- Tomalty, Ray. 2002. Growth Management in the Vancouver Region, The Assessment and Planning Project BC Case Report No. 4,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Resource Studies, University of Waterloo.
- Tranter, Revan. 2001. ABAG: a Concise History: Celebrating 40 Years of Service, UC Berkeley,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2001-13.
- Tranter, Revan. 2001. ABAG: a Concise History: Celebrating 40 Years of Service, UC Berkeley,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2001-13.
- Wright, Deil. 197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orte Situate, MA: Duxbury Press.
- <http://www.gvrd.bc.ca>
- <http://www.abag.ca.gov>
- <http://www.baaqmd.ca.gov>
- <http://www.mtc.ca.gov>

부록 1: 충청권 IT산업 분석결과

□ IT산업 세세분류

구분	분류코드	분류명
디스플레이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9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22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제조업
반도체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399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32194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통신기기 및 부품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1301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2	절연 광섬유케이블 제조업
	31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1402	축전기 제조업
	3219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S/W 콘텐츠	22300	기록매체 복제업
	36943	영상게임기 제조업
	3694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1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0	자료 처리업
	72320	컴퓨터시설 관리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충청권 IT산업 분석결과

구 분	집적 권역	집중도		특화계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디스플레이	수도권	59.2	37.3	1.28	0.75	1,686	36,177
	충청권	10.2	21.4	1.04	2.26	289	20,780
	전라권	5.7	3.2	0.53	0.34	163	3,112
	경상권	22.6	37.2	0.80	1.37	642	36,004
	강원제주권	2.4	0.9	0.47	0.21	67	835
반도체	수도권	69.7	63.0	1.51	1.26	10,240	17,113
	충청권	5.0	12.8	0.51	1.35	730	34,813
	전라권	2.1	4.7	0.19	0.50	302	12,758
	경상권	23.2	19.3	0.82	0.71	3,405	52,541
	강원제주권	0.1	0.1	0.03	0.04	19	391
통신기기및부품	수도권	76.8	63.7	1.66	1.28	5,708	142,325
	충청권	6.1	10.2	0.62	1.07	450	22,686
	전라권	1.8	2.1	0.17	0.22	137	4,612
	경상권	14.8	23.7	0.52	0.87	1,104	52,870
	강원제주권	0.5	0.4	0.10	0.10	36	933
SW콘텐츠	수도권	76.8	88.3	1.66	1.77	7,128	139,280
	충청권	5.2	2.3	0.53	0.24	479	3,654
	전라권	3.4	1.3	0.32	0.13	315	1,989
	경상권	13.2	7.5	0.47	0.28	1,222	11,856
	강원제주권	1.4	0.6	0.29	0.15	134	933

□ 충청권 시군별 IT산업집적지

구분	시군	집중도		특화계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디스플레이	천안시	15.6	59.1	1.49	4.73	45	12,282
	아산시	6.9	11.1	1.96	2.07	20	2,310
	연기군	3.5	4.9	2.05	2.47	10	1,012
	음성군	10.4	2.8	5.39	1.11	30	582
	진천군	5.5	5.0	4.12	2.52	16	1,039
반도체	대덕구	18.6	6.5	3.57	1.13	136	2,270
	천안시	31.1	25.7	2.97	2.06	227	8,948
	아산시	4.7	16.8	1.32	3.12	34	5,841
	연기군	2.1	7.9	1.21	4.02	15	2,757
	청주시	15.5	25.7	1.21	2.05	113	8,951
	음성군	2.9	3.6	1.49	1.43	21	1,250
통신기기 및 부품	청원군	8.5	5.0	4.33	1.74	62	1,753
	천안시	20.4	20.1	1.95	1.61	92	4,550
	아산시	4.7	19.1	1.32	3.55	21	4,328
	연기군	2.9	2.3	1.71	1.16	13	519
	음성군	6.0	4.3	3.11	1.71	27	974
	진천군	4.0	3.5	2.98	1.74	18	784
SW 콘텐츠	청원군	8.4	12.0	4.30	4.16	38	2,732
	대덕구	8.6	6.0	1.64	1.04	41	220
	서구	18.8	19.3	2.17	2.23	90	706
	유성구	32.4	43.5	8.83	8.70	155	1,588
	청주시	17.5	12.5	1.38	1.00	84	456

부록 2 :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I. 연구의 추진배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대전시·충청북도·충청남도는 유사한 역사·문화전통과 지역특성 보유
- 지역간 협력을 통한 자생적 지역경제기반 구축 필요
-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실천수단 확보 필요

2. 연구의 목적

- 광역적인 차원의 발전방향과 전략 제시
- 지역간 협력·제휴방안과 실천수단 제시
-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모형제시

제2장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3개 시·도 전역
• 5개구, 9개시, 17개군, 2출장소 16,557.56km².
-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00~2020년으로 하며, 목표년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년도와 일치하는 2020년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충청권 공동발전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경제(산업), 교통, 관광부문의 목표, 전략, 추진방안을 제시함.

II. 충청권 공동발전의 기본구상

1. 충청권 공동발전의 목표와 전략

1) 기본 목표

- 충청권을 21세기 국가발전 선도거점으로 육성
 - ▶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 ▶ 교통중심기능 강화와 효율적 광역교통체계 구축
- ▶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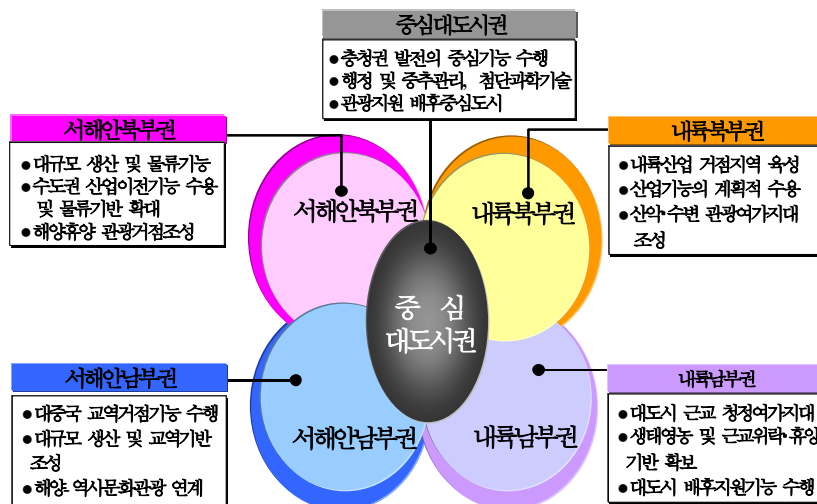
2) 공동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

- 지역간 기능보완 및 협력네트워크 형성
-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 지역현안문제에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2.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간개발구상

1) 5대 통합개발권의 설정과 개발방향

- ▶ 중심대도시권 : 대전광역시, 청주, 청원, 연기·논산·공주(일부)
- 중심대도시권에는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 첨단과학기술과 벤처산업의 보육 기능, 업무 및 전문서비스기능, 관광중심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통합개발권 구상 >

- ▶ 서해안 북부권 : 아산, 당진, 천안, 예산, 청양·공주·홍성(일부)
- 서해안 북부지역은 수도권의 대규모 이전생산기능 수용과 향만을 중심으로 국제교역·물류기능, 천안, 온양과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가족휴양과 역사문화관광 기능을 수행.
- ▶ 서해안 남부권 : 보령, 서천, 부여, 태안·홍성·논산(일부)

- 산업생산기능과 함께 복합적인 관광여가지대 기능을 수행토록 함.
- ▶ 내륙 북부권 : 충주, 제천, 음성, 진천, 단양, 괴산(일부)
-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산업기능 및 산악, 호수, 경관지대 중심의 경관체험 관광 기능을 수행.
- ▶ 내륙 남부권 : 보은, 옥천, 영동, 괴산·금산(일부)
- 내륙 남부권은 산악경관자원, 대청호 등 수변자원을 토대로 한 가족관광·휴양기능을 담당.

2) 연계·보완 개발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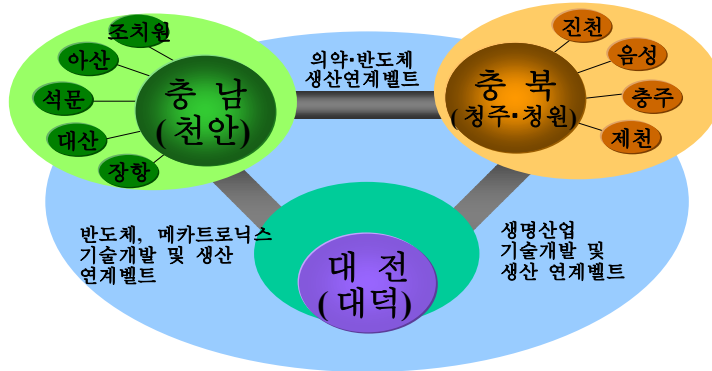
- ▶ 북부 산업개발축 : 서산~당진~아산~천안~음성·진천~증평~충주~제천
- 수도권의 산업기능이전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담 및 휴양기능을 제공.
- ▶ 서해안 신산업 및 해양휴양관광축 : 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 서해안 신산업지대(아산만광역권, 군산-장항광역권)와 해양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생산, 교역 및 휴양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수도권 및 전남북 연안지대와 연계한 서해안 관광벨트를 형성.
- ▶ 동부산악 및 수변관광축 : 충주·단양·제천(일부)~괴산(수안보, 월악산)~보은(속리산)~옥천(대청호)~영동·금산(일부)
- 수려한 산악 및 수변경관을 토대로 한 휴양 및 위락관광벨트를 구축. 북으로는 백두대간, 남으로는 무주와 연계하여 광역적인 내륙관광여가벨트를 형성.
- ▶ 첨단산업 및 역사문화벨트 : 단양·충주·청주(중원문화권)~대전(대덕연구단지)~공주·부여(백제문화권)
-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술 및 내륙역사문화권의 연계개발을 통해 충청권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성 부각에 치중.
- ▶ 산업생산 및 생태영농벨트 : 당진~홍성·예산~공주~(대전)~보은·옥천·영동·금산
- 대규모 산업단지 배후 및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거기능과 생태영농을 통한 지원기능을 수행.

III. 충청권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네트워크 구축

제1장 산업부문 지역협력방안 및 추진시책

1. 충청권 첨단기술산업벨트 공동구축

- 충청권 첨단산업육성 거점으로 활용 : 대전(대덕)~천안·아산~청원(오창·오송)을 연계하여 하나의 첨단기술삼각벨트로 육성



< 충청권 첨단기술삼각벨트 >

- 전략산업 중심의 첨단기술삼각벨트 조성과 연계망 구축
- ▶ 추진전략 1: 첨단기술벨트의 선도거점으로 지역별 거점지역에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군집 형성
- ▶ 추진전략 2: 거점간 산업부문 및 기능적 차원에서 보완 및 연계를 형성하고, 연결지대내 연관산업 배치로 첨단기술벨트화 추진

2. 충청권 기술이전센터의 공동설치

- 외부 기술지원기관의 연계활용 확대
- 3개 시·도 공동출자 및 중앙정부 지원으로 설치
-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육성

3. 충청권 산업정보망의 공동구축

- 민간주도의 산업정보망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무역의 활성화 수단으로 정보망 육성

4. 충청권 중소기업지원 연계체계 구축

- 충청권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 중소기업지원기구간 정보공유 및 협력시스템 구축

5. 충청권 국제경제교류 촉진 공조체계 구축

- 시·도지사 직할의 충청권 산업발전행정협의회 구성
- 자치단체 공동출자를 통한 충청권 무역투자공사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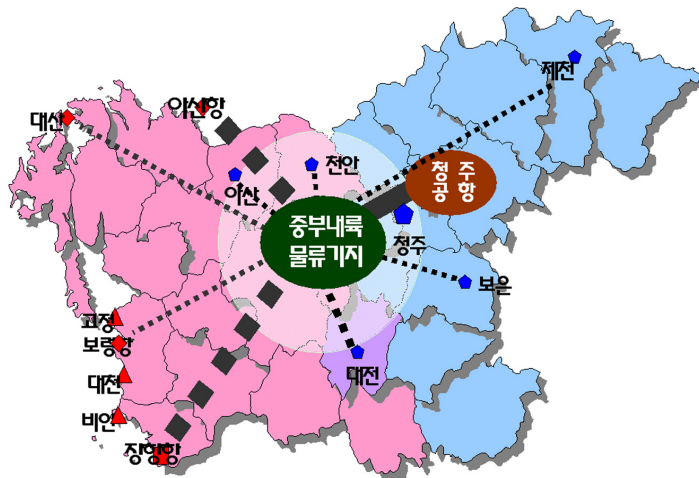
IV.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지역협력방안

1. 청주공항 활성화 공동 추진

- 청주국제공항을 화물전용항 및 부정기 항공의 관문항으로 특화
-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및 이용서비스 개선
- 청주공항과 지역개발과의 연계 강화
- 청주국제공항 관리·감독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2. 중부권 물류기지의 공동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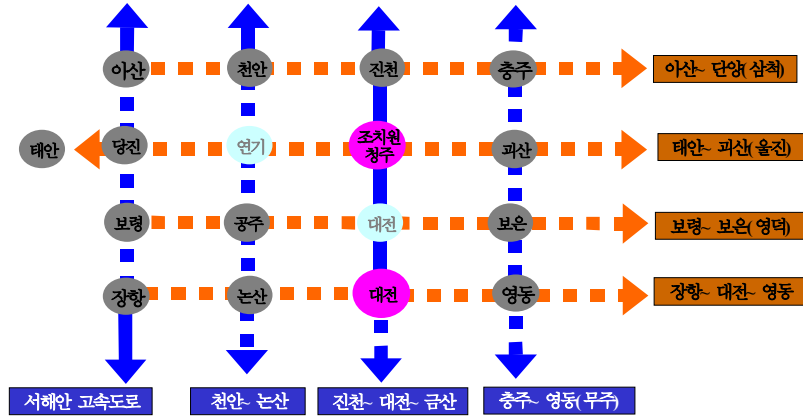
- 중부권 물류기지와 주요 간선교통체계와 연계 추진
- 내륙항 기능 도입 및 이용 활성화 공동 추진
- 충청권내 통합 물류체계의 공동 구축
- 충청권의 공동관리운영체계 확립



<중부권 통합물류체계>

3. 충청권 광역교통망 공동구축 추진

- 충청권 동서간선도로망의 건설 추진
- 동서축 보강을 위한 철도망 신설 및 연계 공동추진



<충청권 통합교통체계 구축: 4 * 4 간선체계 >

- 대도시~주변 간선 도로망 확충
 - 대전~공주~당진, 대전~금산, 청주~조치원~공주, 청주~천안간 대도시와 주변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간선도로망을 공동으로 구축.
 - 충청권 첨단기술삼각벨트 조성, 광역관광루트 형성, 청주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청주간 청주~천안간 고속간선 도로망을 전략적으로 추진.

4. 충청권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의 공동구축

- 통합도시교통망 구축
- 생활권 단위의 버스·택시 등 통합교통구역제 도입
- 충청권 대도시 광역 전철망 공동 추진

5. 충청권 광역교통 행정협의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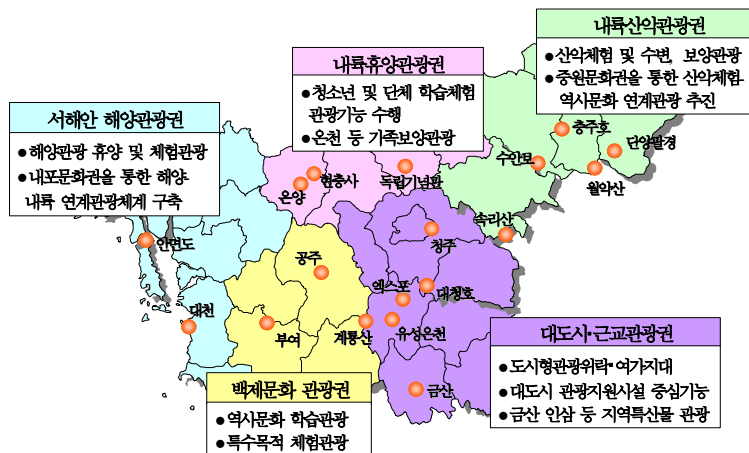
- 시·도지사 직속의 충청권 광역교통행정협의회 공동운영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참여의 광역교통기획단 조기설치 건의
- 청주국제공항 공동진흥기구 설립·운영
- 중부내륙 화물기지 관리기구의 공동설치 및 운영

V. 충청권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협력방안

제1장 관광부문 지역협력방안 및 추진시책

1. 5대 통합관광권 18대 핵심관광거점 공동개발

- 기존의 19대 관광권을 5대 통합관광권으로 묶어 특화개발 공동 추진
 - 대도시 및 근교관광권 • 서해안 해양관광권
 - 내륙휴양관광권 • 내륙산악관광권
 - 백제문화관광권
- 18대 핵심관광거점을 관광객 체재지로 육성
 - 대덕, 엑스포과학공원, 유성온천, 속리산, 단양팔경, 수안보, 천안 독립기념관, 공주, 부여,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충청권의 18대 핵심거점을 상징성 및 관광객 유인 잠재력을 기초로 선정 육성



< 5대 통합관광권 18대 핵심관광거점 >

2. 충청권 광역관광루트 공동개발

-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의 테마화와 관광루트별 고유기능 부여·개발
 - ▶ 역사문화가도 : 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중원문화권~(경북북부유교문화권)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지대 구축
 - ▶ 교육·학습체험 관광루트 : (서울·수도권)~독립기념관·현충사~백제역사문화유적~대덕연구단지·엑스포과학공원~고인쇄박물관~충렬사

- ▶ 금강운하 관광루트 : 금강하구둑~부여·공주~대청댐(대전)~미호천(청주)을 잇는 금강연계 및 주변관광자원 연계 개발



< 충청권 광역관광루트 >

- 인접지역과 연계를 통한 국가차원의 광역관광루트 개발
 - ▶ 서해안 해양관광루트 : (수도권)~태안해안국립공원~보령(대천해수욕장)~(전남·북)을 잇는 국가적인 해양관광루트 개발
 - ▶ 산악체험 관광루트 : (강원)~중원문화권~동부산악경관지대(소백·월악·속리산)~(무주)를 잇는 국토 중심부를 잇는 체험형 관광루트 개발

3. 테마파크의 공동 개발 및 유치

- 3개 시·도 접경지역내 충청권 고유의 테마파크 공동 건설·운영
- 대규모 국가관광문화시설의 공동 유치 추진

4. 충청권 관광산업의 고도화와 마케팅 공동추진

- 충청권 통합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 관광객 유치 및 표적시장별 마케팅 공동추진

5. 충청권 관광진흥전담기구 설치

- 관광자원의 공동이용 및 연계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 충청권 전문상설관광진흥기구의 설치·운영

VI.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집행·관리방안

제1장 충청권 지역협력사업의 추진전략

1. 산업부문 협력사업 추진전략

- 산업부문 지역협력사업은 협력사업 가운데 특별한 제도적 장치와 공동부담 없이 각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협력사업의 효과달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실천
- 향후 5년 이내에 산업부문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점지역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역간 산업연계 지원을 위한 정보망 구축 등 기업·인적 교류와 네트워크 구성에 치중하고, 기존의 자원을 공유·연계하는데 치중.

< 산업부문 협력사업과 시책 추진전략 >

추진시책		사업명	추진단계		
			1단계 (2005)	2단계 (2010)	3단계 (2020)
충청권 첨단산업 기술벨트 구축	첨단정보산업 단지	대전과학산업단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식정보산업복합단지			
		대전벤처기업협동화단지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단지			
		청주공항산업단지			
		충남아산테크노컴플렉스			
	전략산업육성 지원	충남메카트로닉스산업단지			
		충남연기첨단산업단지 (벤처기업 정착단지,공동)			
		대전생물·의약지원센터			
		대전영상·음반지원센터			
	산업인프라구 축	충북 SOMAD설치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기능전문화 및 네트워킹)			
		거점지역 및 거점간 광통신망구축			
		광역지역정보센터			
충청권 기술이전지원센터 공동설치		충청권 기술이전센터(공동)			
		대덕벤처기술평가센터			
충청권 산업정보망 공동구축		충청권 산업정보체계 공동구축			
		충청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충청권 종합정보통신센터			
충청권 중소기업지원 연계체계 구축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문화 및 네트워킹)			
		대전종합무역센터 (충청권 종합무역센터 확대)			
충청권 산업진흥 공조 및 공동기구 설치		대전 국제테크노마트			
		해외시장개척 공조사업추진			
		충청권 산업진흥 전담기구			

2. 교통부문 지역협력사업의 추진전략

- 교통부문의 사업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업, 지원요구사업, 자체적 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됨.
- 향후 5년 이내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청주공항~대전간 간선도로 및 경전철, 공항화물터미널 확충, 지역간 연계도로망 건설사업과 생활권 단위의 대중교통노선과 운행구역 조정사업 등.

< 교통부문 지역협력사업과 시책 추진전략 >

추진 시책		사 업 명	추진 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10)	3단계 (2020)
청주공항 활성화 공조	공항시설확충	활주로연장			
		화물터미널 및 기타시설			
	접근성개선	청주공항-대전간 경전철			
		서울(강남)-용인-안성-청주공항			
	주변지역개발	소규모 지역연계 공항건설			
		항공산업단지 조성			
물류거점 공동조성	중부권내륙물류기	중부권 내륙물류기지			
		중부권 내륙물류기지 진입도로			
	항만 육성	지역연계 물류센터 건설			
		아산항			
	금강내륙운하	강항항			
		보령항			
충청권 광역교통망 공동구축	동서 및 남북간선축 형성	금강내륙운하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충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태안-울진간 고속도로			
		보령-영덕간 고속도로			
		서천-영덕간 고속도로			
	지역간 연계도로 공동구축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내륙순환고속도로			
		대전-진주(금산)간 고속도로			
		갑천-충북시목삼거리 우회도로			
		대전-별곡, 현도-강위, 연산-대전, 오창-병천간 지방도			
		대전-복수			
	철도망 구축	대평-송강			
		부여-금강하구둑 금강변도로			
		경부고속철도			
충청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시설	서해안(동서)산업철도			
		충청선(보령-조치원)			
	대중교통시스 템 공동운영	여주-충주 ~ 문경간 철도			
		대전지하철 연장			
		충북선 전철화			
		충청권 ITS 시범사업 추진			
		생활권 단위 대중교통동일구역제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공조체제			

3. 관광부문 지역협력사업의 추진전략

- 충청권관광진흥을 위한 지역협력사업은 관광루트 개발, 마케팅 공조 등은 실무 적적 협의와 공동작업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
- 충청권 관광정보망의 공동구축, 관광안내책자 등 공동발간, 표적시장별 전담마케팅, 국제전통예술문화축제 등 다양한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관광실무자 협의회 외에 구체적 추진방안의 마련, 집행을 위한 상설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관광부문 지역협력사업과 시책 추진전략 >

추진시책		사 업 명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10)	3단계 (2020)
관광권 및 핵심관광거 점 육성	관광지 및 관광시설 중점개발	안면도 국제관광지			
		옥산종합리조트			
		청주랜드			
		충남 청라종합레저단지			
		청풍랜드			
		스포츠게임타운			
		조정지구개발			
		대전국립박물관			
	숙박시설 확충	대전 가족휴양촌			
충청권 광역관광루 트개발	문화권 개발	백제문화권			
		중원문화권			
		내포문화권			
	관광정보 및 안내체계 공동구축	루트별 관광안내 정보 루트별 교통편의시설 확충			
테마파크 공동개발	테마파크 개발	백제역사재현단지			
		충청권 민속 양반촌			
	컨벤션 육성	대전국제컨벤션센터			
		충북수안보컨벤션센터			
		오송국제컨벤션센터			
		청주 밀레니엄 타운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공동추진	충청권 통합관광안내 정보체계 구축	충청권 관광안내소 공동설치 운영			
		충청권 통합관광정보망 구축			
		충청권 관광안내 및 브로셔 공동제작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공동추진	국내외 표적시장별 전담마케팅제 도입			
		충청권 관광업체간 공동품질인증제 및 체인화			
충청권 관광진흥 체계구축	충청권 관광이미지 및 이벤트 공동개발	충청권 관광이미지 선정 및 hospitality zone선포			
		국제전통예술문화축제 공동개최			

제2장 지역협력사업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1. 총투자비 산정 및 투자계획

-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총 투자사업비 : 약20조 8,760억원
- 부문별·주체별 투자사업비 분담내역

< 총 투자비 산정 및 분담내역(억원, %) >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간·기타
부문 계	208,760 (100.0)	100.0	108,437 (52.0)	16,963 (8.1)	83,360 (39.9)
산업부문	30,790 (100.0)	14.8	8,968 (29.1)	3,462 (11.2)	18,360 (59.6)
교통부문	138,825 (100.0)	66.5	92,442 (66.6)	10,793 (7.8)	35,590 (25.6)
관광부문	39,145 (100.0)	18.8	7,027 (18.0)	2,708 (6.9)	29,410 (75.1)

- 단계별 투자계획

< 단계별 투자비 분담내역(억원, %) >

구 분	총사업비	1단계(2001 ~ 2005)				2단계 (2010)	3단계 (2020)
			국비	지방비	민간		
부문 계	208,760 (100.0)	50,625 (24.3)	35.8	9.0	55.1	70,967 (34.0)	87,168 (41.8)
산업부문	30,790 (100.0)	17,250 (56.0)	29.1	11.2	59.7	11,940 (38.8)	1,600 (5.2)
교통부문	138,825 (100.0)	14,961 (10.8)	66.6	8.3	25.1	45,922 (33.1)	77,942 (56.1)
관광부문	39,145 (100.0)	18,414 (47.0)	17.1	7.6	75.3	13,105 (33.5)	7,626 (19.5)

2. 재원조달방안

1) 기본방향

-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별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
- 지역산업 및 기술지원, 창업, 정보망의 구축 및 관광산업 육성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
- 수익성을 지닌 공공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을 원칙적으로 민간투자자로 재원을 조달.

< 사업유형별 재원조달모형 >

사업 유형	재원조달 방식	협력사업 예시
S O C 및 광역서비스 사업	국비지원 지역별 예산분담 공동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남북 4*4 간선교통체계 • 중부 내륙물류기지 개발 • 청주국제공항 기능확충 •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운영 • 산업정보망 구축 • 산업자원 및 시설공동 이용체계
수익연계 사업	Project financing 민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조성 • 대형 이벤트 및 축제개최 등

<사업유형별 추진방식>

추진 방식	주요 개발사업(예시)
중앙정부 공동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구축 · 청주공항 관리·감독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중부권 물류기지 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참여 확대
중앙정부와 정책협력 추진 (중앙정부 프로그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산업정보망 구축 · 충청권 기술이전센터 공동설치 · 충청권 산업진흥(수출진흥)기구 공동설치 · 충청권 관광진흥전담기구 공동설치 운영
지역공동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첨단기술삼각벨트구축 시범사업 · 충청권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 · 충청권 광역교통 행정협의회 설치 · 충청권 테마파크의 개발(양반 민속촌 등) · 충청권 관광진흥 및 마케팅 공동추진
지역협력 추진방식 (개별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첨단기술삼각벨트 구축을 위한 전략산업 배치 및 육성 등 · 충청권 중소기업지원 연계체계 구축 · 관광권별 핵심관광거점의 중점 육성 · 충청권 테마광역관광루트 개발

2)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유형

-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공채재원(민간자금 포함), 기타 재원으로 구분.

<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유형 >

재원조달수단	자금 출처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수익
이전재원	
국고보조금	·국가재정수입, 공채
도비보조금	·국가 및 도의 재정수입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일정비율
지방양여금	·국세의 일부세목
중앙정부 특별회계	·재정투자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로사업 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기 금	·중앙기금: 재정투자 특별회계의 출연금, 융자금 등 ·지방기금: 지역개발기금, 상하수도지원금고 및 운용수익금
지방채	·정부자금(기금, 자금관리특별회계), 민간자금, 해외차관, 공모공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회계간 이전 또는 기금이나 적립금으로부터 이전자금
기 타	·지방자치단체 발행복권, 민간자본 유치

자료: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리산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1999, 290면.

○ 중앙정부 투자재원확보 추진

-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하여 3개 시·도가 개별적 혹은 협력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자체재원의 분담과 아울러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및 예산우선지원제 등의 도입을 촉구.

○ 민자유치 촉진

- 산업부문, 관광부문 중 수익성이 있는 지역협력사업을 선별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민간이나 외국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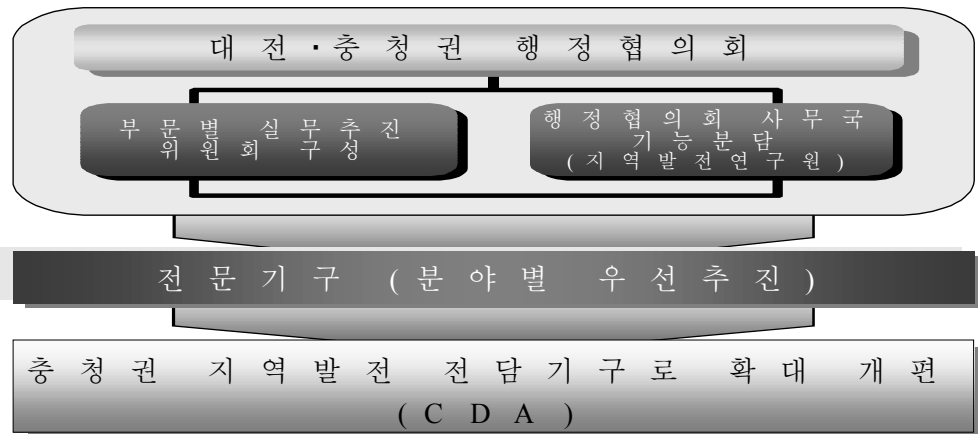
제3장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추진체계 구축

1. 대전·충청권 행정협회의의 기능보완 활용

- 단기적으로 기존의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기능을 활용,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진흥 등 특수기능의 전문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의 경험과 성취도를 바탕으로 agency 성격의 충청권 지역발전전담기구(CDA: chungcheong development agency)로 발전시킴.
-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산하에 산업, 교통, 관광부문 실무자로 구성된 충청권 공동발전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문별 협력 및 공조사업의 선별, 추진방안의 구상, 집행과정의 협의·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의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별 연구원이 사무국 기능을 분담하도록 함.

2. 충청권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치

- 충청권내 지역협력을 위해 수출진흥,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 관광산업 육성, 광역교통의 여러 분야 가운데 여건이 성숙된 분야의 전문전담기구를 3개 시·도 및 중앙정부의 공동출자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
- 충청권 지역발전전담기구(CDA)는 충청권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전략수립과 사업추진, 지원 등을 담당함으로써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업무와 각종 개발사업 집행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자가 바람직하고, agency성격의 법적인 지위를 갖추게 됨.
- 지역발전 전담기구는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 법적 지위와 정부의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으나 운영방식은 독자적이고, 기업경영과 같은 자율성을 지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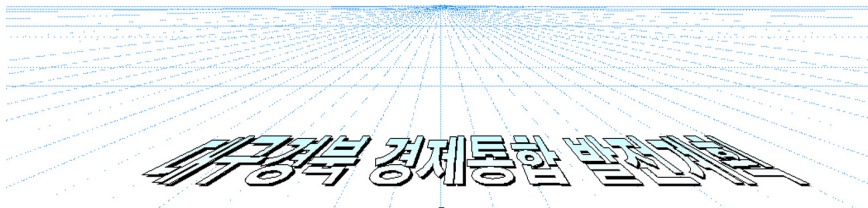
< 충청권 지역협력추진체계 설치방안 >

부록 3: 대구·경북 동반발전을 위한 경제통합 방안



목 차

- I 계획의 기초
- II 부문별 계획
- III 대구경북경제통합의 추진체계



I 계획의 기초

1. 계획의 목적

2. 비전 및 목표

대구경북경제통합 정책개발사업

❄ 계획의 목적

대구경북공동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 시너지 효과가 큰 공동사업을 발굴 :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발전을 추진
- 공간적 분업과 협력을 통해 일체화된 경제통합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구경북경제권을 형성

대구경북 공동정책마련을 통한 낭비적 요소 최소화

- 역사적, 지리적 측면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협력의 전통을 형성하는 것임
- 경제통합은 지나친 경쟁과 불필요한 낭비를 극복하는 효과적 방안인 동시에 서로의 강점을 살려 상생의 길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당면 과제임

❄️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4년, 목표년도 : 2011년
- 추진실적 및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을 둠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구를 포함
- 필요에 따라 영남권내 인접 시·도지역까지 포함

내용적 범위

-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 모든 분야별 계획과 연계한 장기발전 기본방향 정립
- 경제산업, 도시계획 및 교통, 문화관광, 균형발전 등 전 부문에 걸친 실질적인 대구경북 장기계획 수립

5

❄️ 비전과 목표



6



❄️ 경제산업부문 비전 및 목표

비전 선택과 집중,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재도약

목표 대구경북 협력을 통한 R&D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대구경북 공동 산업클러스터 구축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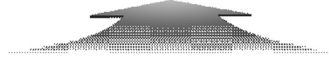
- ❖ 대구경북 공동투자유치
- ❖ 대구경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중점지원
- ❖ 대구경북 산업단지 연계 활성화
- ❖ 대구경북 MT 산업 클러스터 조성
- ❖ 대구경북 첨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 ❖ 지역 강점형 IT 산업 경쟁력 강화
- ❖ 대구경북 CT 산업 협력 기반 마련
- ❖ 대구경북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 ❖ 대구경북 에너지산업 협력 및 기반구축

❄ 도시교통부문 비전 및 목표

비전 **조화로운 통합생활권 형성으로 지역동질성 회복**

목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상생할 수 있는 통합 도시계획사업 추진

표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 사회기반시설 구축



주
진
사
업

- ❖ 대구경북 통합중장기종합계획 수립
- ❖ 대구경북 연접지역 자연자원 공동관리계획 수립
- ❖ 대구공항활성화 추진
- ❖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
- ❖ 대구선 복선 전철화사업 조기 개통

9

❄ 문화관광부문 비전 및 목표

비전 **Network 관광, win-win 대구경북**

목 통일한국에 대비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관광분야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

표 통합을 통한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
지역관광의 양적 질적 성장



주
진
사
업

- ❖ KTX 연계 대구?경북 One day trip 상품 개발
- ❖ 대구경북 템플 Stay 공동추진
- ❖ 대구경북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도입
- ❖ 대구경북 관광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 ❖ 대구경북 공동관광홍보

10



균형발전부문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격차 없는 하나된 마음! 하나된 지역사회!

**목
표**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격차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도농간 차별없는 삶의 혜택 누리기
산업간지역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추
진
사
업**

- ❖ 북부지역 균형발전 공동네트워크 설치
- ❖ 경상북도 행정기관 북부지역 이전
- ❖ 낙동강 그린프로젝트(에코벨트) 추진
- ❖ 대구경북 도농상생교류 협력사업
- ❖ 그린BT 클러스터 구축
- ❖ U-웰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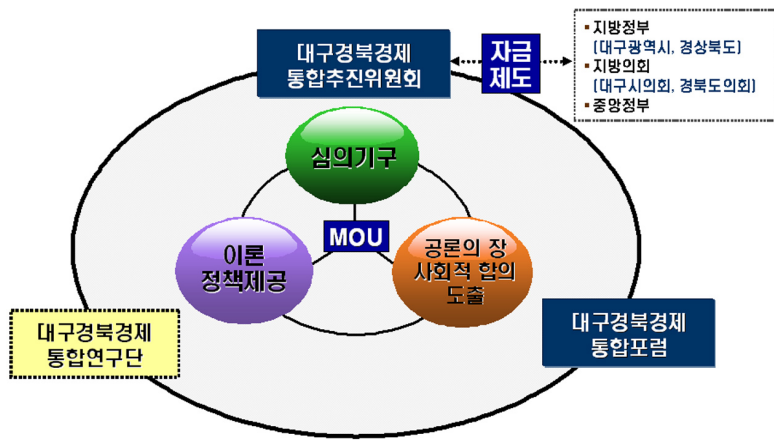
11

Ⅲ 대구경북경제통합의 추진체계

1. 경제통합과 추진체계
2. 추진조직 및 기구의 역할
3. 자원확보 방안

대구경북경제통합 중장기발전계획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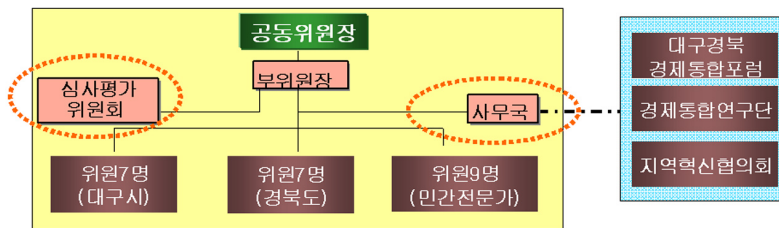


13

❄️ 경제통합 추진위원회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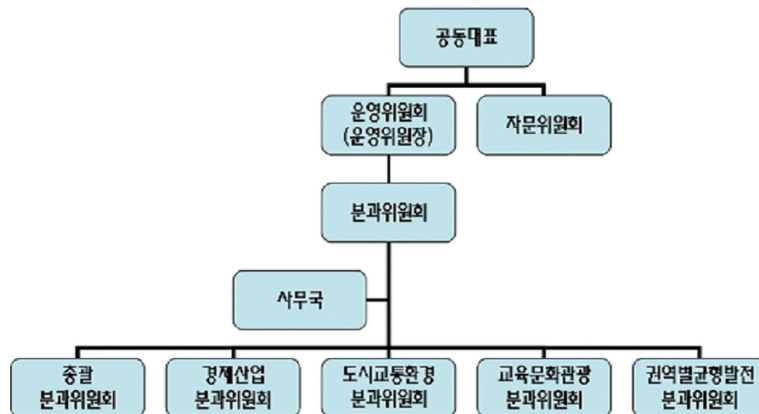
- 공동위원장은 시도 부기관장, 위원은 시도 실·국장 및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시도 기획관은 위원 겸 간사
- 회의는 운번제로 운영, 정례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 심사평가위원회, 사무국(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내) 설치 검토



14

❄️ 경제통합포럼

구 성



15

❄️ 경제통합연구단

성 격

-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발전의 싱크탱크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 위원회의 지원기관

구성 및 역할

- 단장 및 연구위원, 시와 도의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정책의 발굴, 제언, 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 및 지원 기능 수행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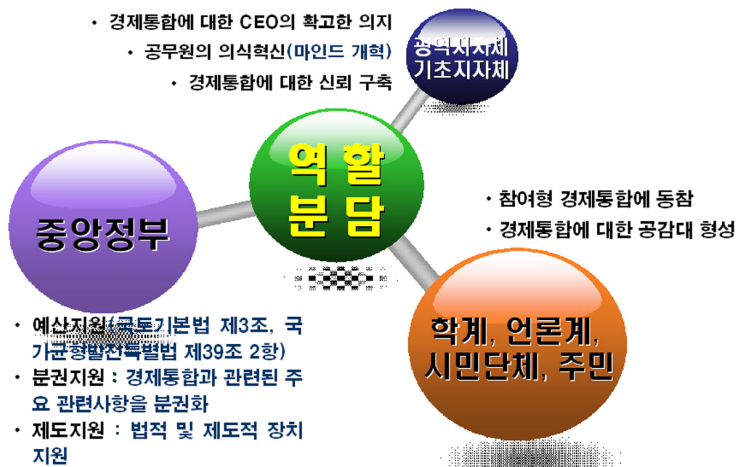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 역 할 ❖

-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 산업발전의 조정자, 중앙과 지방간의 창구 역할
 - 경제통합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중앙의 지원 및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 수행
- 시·군 지역혁신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한 개발, 독립적 사업추진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의 전환

17

❄️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18

❄️ 재원확보 방안

❖ 균특회계 ❖

- 특별회계의 추가적인 신규재원 발굴 및 양여금 포함
- 균형과 효율을 조화시킨 지역발전(산업)예산 배정
- 포괄보조금 형태의 자율적인 협약 해결 방식으로 예산 집행

❖ 중앙, 지방간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

-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 지방소득세제 도입 검토
- 지방소비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

19

❄️ 재원확보 방안

❖ 지방이전재정제도 개편 ❖

- 교부세 및 보조금제도 개편
- 탄력세율제도의 활용도 제고

❖ 지역발전협력기금 조성 ❖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공동분담

❖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

- 민자유치의 실효성 제고 및 과학적 사업추진 및 타당성 분석
- 민자유치 방식의 다양화

❖ 지방채 활성화 및 안정적 채무관리 ❖

- 지방재정 진단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

20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신동호 한남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 강영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전영노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연구원

충발연 2006-04 · 충청권 지역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연구

글쓴이 · 신동호 · 강영주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6년 12월 31일 / 발행 · 2006년 12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301-745)

전화 · 042-820-1120(기획정보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89552-96-3 93320

<http://www.cdi.re.kr>

©2006.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